

김정은 1년, 북한주민의 의식과 사회변동:

2013 북한이탈주민의식 및 사회변동 조사

일시 2013. 8. 29 (목) 14:00~18: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01동 240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회 진행순서

개회사 (14:00~14:10) 박명규 (IPUS 원장)

제1부 : 북한주민의 삶과 의식 (14:10~16:00)

사 회 김병연 (IPUS 부원장, 서울대 교수)

발표 1 북한사회의 의식주

정은미 (IPUS HK연구교수)

발표 2 북한사회의 시장화와 소득분화

장용석 (IPUS 선임연구원)

발표 3 북한주민의 북한과 남북관계 인식

김병로 (IPUS HK교수)

발표 4 북한주민의 통일과 한반도 미래 인식

송영훈 (IPUS 선임연구원)

휴 식 (16:00~16:15)

제2부 패널토론 : 북한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16:15~18:00)

사 회 박명규 (IPUS 원장)

토 론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원장)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지명 (북녘마을 편집장)

목 차

조사개요 : 북한주민의 의식과 사회변동	09
발표 1 : 북한사회의 의식주	19
정은미 (IPUS HK연구교수)	
발표 2 : 북한사회의 시장화와 소득분화	35
장용석 (IPUS 선임연구원)	
발표 3 : 북한주민의 대남인식과 북한실태 변화	51
김병로 (IPUS HK교수)	
발표 4 : 북한주민의 통일과 한반도 미래 인식	85
송영훈 (IPUS 선임연구원)	

조사개요

북한주민의 의식과 사회변동

북한주민의 의식과 사회변동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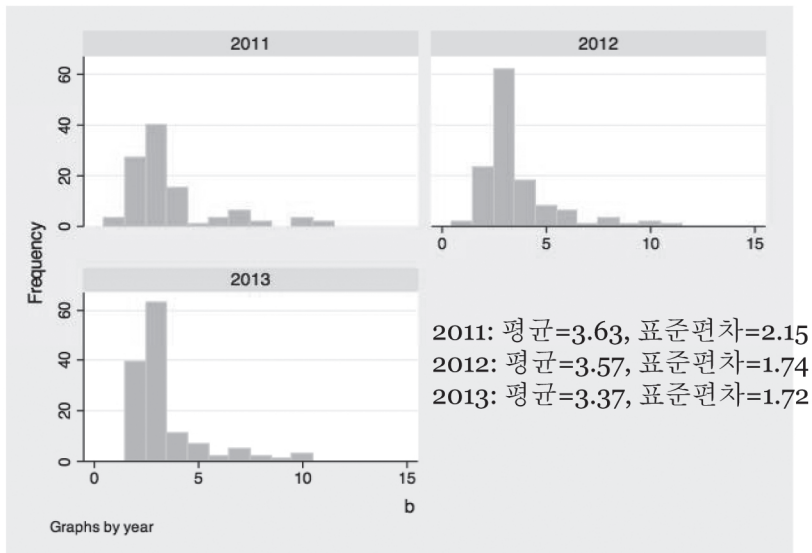
조사방법, 표본, 조사내용

조사연도	2011	2012	2013
조사기간	4/15-6/4	4/6-6/2	6/13-7/16
탈북연도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2010	103		
2011	2	127	
2012			133
총 계	105	127	133
조사방법	면대면 설문조사		
조사내용			
통일의식	Y	Y	Y
대남의식	Y	Y	Y
북한실태변화	Y	Y	Y
남한적응실태	Y	Y	Y
주변국인식	--	Y	Y

성별, 연령별 분포

연령	2011		2012		2013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20대	14 (38.9)	22 (61.1)	23 (51.1)	22 (48.9)	24 (52.2)	22 (47.8)
30대	11 (40.7)	16 (59.3)	11 (47.8)	12 (52.2)	17 (58.6)	12 (41.4)
40대	6 (35.3)	11 (64.7)	11 (32.4)	23 (67.7)	11 (29.0)	27 (71.1)
50대	1 (7.7)	12 (92.3)	5 (38.5)	8 (61.5)	7 (43.8)	9 (56.3)
60대이상	4 (33.3)	8 (66.7)	6 (50.0)	6 (50.0)	0 (0.0)	4 (100.0)
합계	36 (34.3)	69 (65.7)	56 (44.1)	71 (55.9)	59 (44.4)	74 (55.6)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기간



응답자의 탈북 전 최종 거주지

북한의 출신지	조사년도		
	2011	2012	2013
평양	0	0	1
남포	0	1	0
평안남도	5	0	2
평안북도	0	1	6
함경남도	4	14	11
함경북도	55	65	51
양강도	40	39	58
황해남도	0	3	0
황해북도	1	3	1
강원도	0	1	2
합계	105	127	132

교육수준별 응답자 분포

교육수준	조사년도		
	2011	2012	2013
대학교	11.4	10.4	16.5
전문학교	21.0	18.4	11.3
고등중학교	66.7	66.4	71.4
인민학교	1.0	3.2	0.0
무학	0.0	1.6	0.8
합계(빈도)	105	125	133

직업별 응답자 분포

북한에서의 직업	조사년도		
	2011	2012	2013
노동자	29.3	37.6	31.6
농민	9.1	8.8	3.8
사무원	13.1	4.8	9.8
전문가 (교원, 의사, 기술자 등)	8.1	7.2	8.3
학생	7.1	6.4	6.0
군인	6.1	4.0	4.5
외화벌이군	1.0	2.4	2.3
장사	11.1	11.2	13.5
주부	11.1	11.2	16.5
무직 및 기타	4.0	6.4	3.8
합계(빈도)	99	125	133

당원별 응답자 분포

당원여부	조사년도		
	2011	2012	2013
당원	9.9	14.4	14.3
후보당원	1.0	0.0	0.0
비당원	89.1	85.6	85.7
합계	101	125	133

공식 월급과 비공식 수입

공식월급	조사년도			비공식 수입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0원	27	32	69	0원	18	21	35
1000원 미만	7	10	2	1000원 미만	6	0	3
5000원 미만	37	46	49	5000원 미만	7	2	0
1만원 미만	2	4	5	1만원 미만	2	2	3
10만원 미만	6	9	0	10만원 미만	18	25	9
50만원 미만	2	5	4	50만원 미만	19	44	52
100만원 미만	1	0	2	100만원 미만	6	8	10
1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6	7	19
무응답	23	21	2	무응답	23	18	2
합계	105	127	133	합계	105	127	133

장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분포

장사경험	조사년도		
	2011	2012	2013
있다	71.3	69.8	74.4
없다	28.7	30.2	25.6
합계 (N)	101	126	133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북한소식	조사년도		
	2011	2012	2013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3.7	19.7	22.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6.9	59.1	57.1
거의 접할수 없었다	29.4	21.3	20.3
합계(빈도)	102	127	133

남한친척의 유무에 따른 응답자 분포

남한친척	조사년도		
	2011	2012	2013
없다	40.2	37.8	34.6
있다	59.8	62.2	65.4
합계(N)	102	127	133

결혼상태에 따른 응답자 분포

결혼상태	조사년도		
	2011	2012	2013
미혼	55.6	46.0	37.6
결혼 (동거포함)	44.4	44.4	53.4
이혼	0.0	9.5	9.0
합계 (N)	99	126	133

자녀의 수에 따른 응답자 분포

자녀의 수	조사년도		
	2011	2012	2013
0명	29.6	30.4	38.4
1명	35.8	34.3	32.3
2명	22.2	24.5	24.1
3명	7.4	8.8	4.5
4명	4.9	2.0	0.8
합계 (N)	81	102	133

북한주민의 삶과 의식

- 발표 1

북한사회의 의식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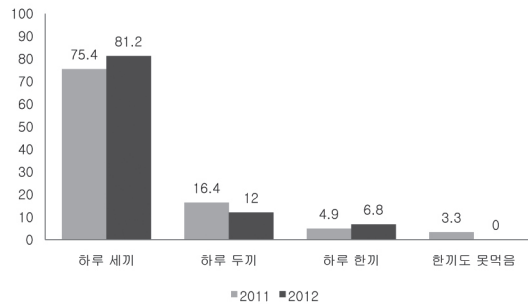
정은미 (IPUS HK연구교수)

2012 & 2013 북한사회변동조사 설문내용 비교(II)

범주	2012년	2013년
시장화의 양상과 변화	시장경제활동 중 주요 수입원천 시장경제활동의 자재/원료의 원산지 시장경제활동의 애로사항 고용노동의 규모와 기간 시기별 장사 단속의 정도 사유화의 기대 대상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삭제 좌동
사회의 개방성	정치에 대한 관심 변화 경쟁의식의 변화 타 지역으로의 이동성 변화	삭제 삭제 삭제
인구사회학적 배경	성별 출생연도 탈북/입국 연월 교육수준 북한에서의 거주지역 북한에서의 직업 당원여부 장사 경험 유무 탈북 후 북한지역과의 정보교류 탈북 이전 남한사회 내 친인척 유무 혼인상태 자녀의 수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하루 식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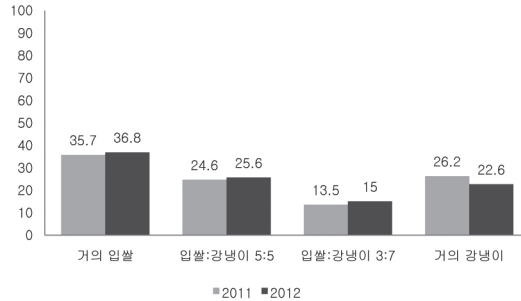
- 하루 식사 횟수 증가
- 탈북직전 2012년에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하루 세끼 식사 유지
- 식생활의 양적 향상:
2011년 75.4% → 2012년 81.2% (5.8%p ↑)
- 식량농업기구(FAO) 발표: 2012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 503만톤(2011년 475만톤, 5.9% 증가 추정)



구분	2011년	2012년
하루 세끼	92(75.4)	108(81.2)
하루 두끼	20(16.4)	16(12.0)
하루 한끼	6(4.9)	9(6.8)
한끼도 못먹음	4(3.3)	0(0.0)
합계	122(100.0)	133(100.0)

주식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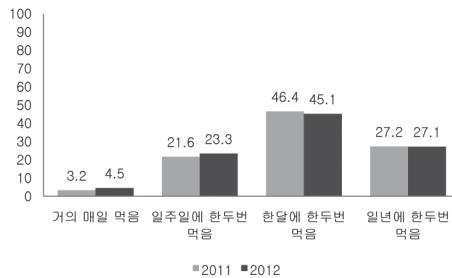
- 주식의 구성 변동 거의 없음
- 거의 쌀밥만 먹은 응답자는 10명 중 3~4명에 불과
- 식생활의 질적 향상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음



구분	2011년	2012년
거의 입쌀	45(35.7)	49(36.8)
입쌀:강냉이(5:5)	31(24.6)	34(25.6)
입쌀:강냉이(3:7)	17(13.5)	20(15.0)
거의 강냉이	33(26.2)	30(22.6)
합계	126(100.0)	133(100.0)

고기의 섭취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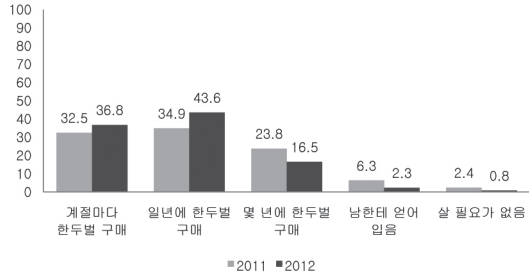
- 고기 섭취는 한달에 한두번 먹는 경우가 가장 많음
- 거의 매일 먹거나 일주일에 한두번 먹는다는 응답 소폭 증가
- 일년에 고기를 한두번밖에 먹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도 여전히 많음
(2011년 27.2%, 2012년 27.1%)



구분	2011년	2012년
거의 매일 먹음	4(3.2)	6(4.5)
일주일에 한두번 먹음	27(21.6)	31(23.3)
한달에 한두번 먹음	58(46.4)	60(45.1)
일년에 한두번 먹음	34(27.2)	36(27.1)
먹어본 적 없음	2(1.6)	0(0.0)
합계	125(100.0)	133(100.0)

의류의 구매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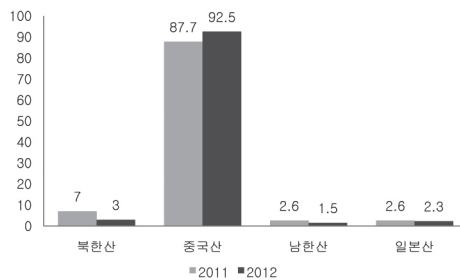
- 의생활의 양적 증가
눈에 띄게 나타남
- 계절마다 한두벌 구매
응답률 증가
(4.3%p ↑)
- 일년에 한두벌 구매
응답률 증가
(8.7%p ↑)



구분	2011년	2012년
계절마다 한두벌 구매	41(32.5)	49(36.8)
일년에 한두벌 구매	44(34.9)	58(43.6)
몇 년에 한두벌 구매	30(23.8)	22(16.5)
남한테 얻어 입음	8(6.3)	3(2.3)
살 필요가 없었음	3(2.4)	1(0.8)
합계	126(100.0)	133(100.0)

의류의 원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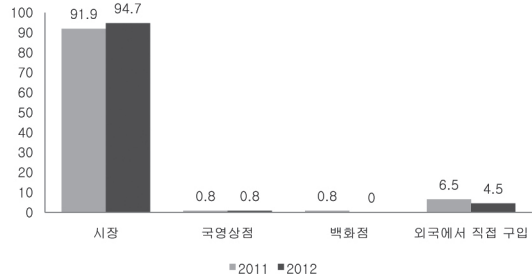
- 중국산 의존도가 압
도적임 (4.8%p ↑)
- 남북관계 악화 지속
으로 남한산 응답률
은 감소함
- 북한의 소비재산업의
회생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북한산 4%p ↓)



구분	2011년	2012년
북한산	8(7.0)	4(3.0)
중국산	100(87.7)	123(92.5)
남한산	3(2.6)	2(1.5)
일본산	3(2.6)	3(2.3)
합계	114(100.0)	133(100.0)

의류의 구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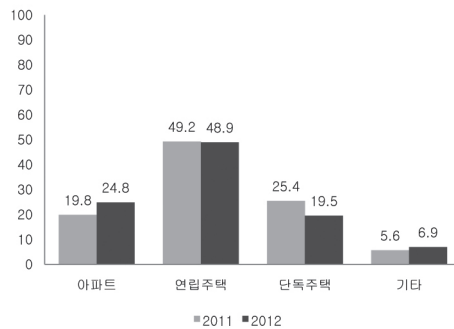
- 시장의존도 절대적 (2.8%p ↑)
- 국영상점을 통한 유통망의 완전 붕괴



구분	2011년	2012년
시장(또는 장마당)	113(91.9)	126(94.7)
국영상점	1(0.8)	1(0.8)
백화점	1(0.8)	0(0.0)
외국에서 직접 구입	8(6.5)	6(4.5)
합계	123(100.0)	133(100.0)

살림집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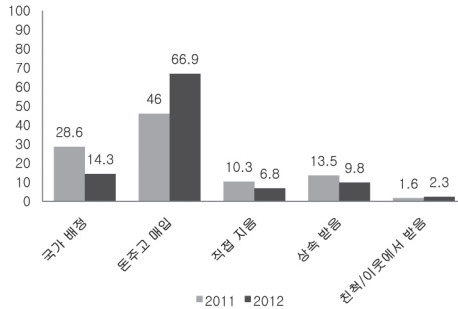
- 아파트 거주 응답자 증가(5%p ↑)
- 단독주택 거주 응답자 감소(5.9%p ↓)
- 연립주택 거주자가 절반 가까이에 이룸



구분	2011년	2012년
아파트	25(19.8)	33(24.8)
연립주택(하모니카집)	62(49.2)	65(48.9)
단독주택(독집)	32(25.4)	26(19.5)
기타	7(5.6)	9(6.9)
합계	126(100.0)	133(100.0)

살림집 장만 경로

- 본인이 돈을 주고 샀다는 응답자 크게 증가 (20.9%p ↑)
- 비공식적이지만 북한 사회에 주택시장이 형성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활성화되어 있음을 시사함
- 국가에서 배정받은 집을 유지하는 비율은 크게 감소(14.3%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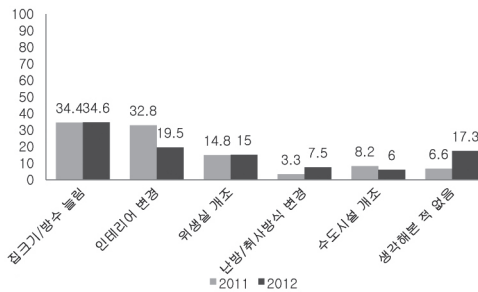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국가에서 배정받음	36(28.6)	19(14.3)
내가 돈주고 샀음	58(46.0)	89(66.9)
내가 직접 지었음	13(10.3)	9(6.8)
조상/부모로부터 물려받음	17(13.5)	13(9.8)
친척/주변사람한테 받음	2(1.6)	3(2.3)
합계	126(100.0)	133(100.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

-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 크게 증가 (10.7%p ↑)
- 인테리어 변경 희망 응답 크게 감소 (13.3%p ↓)
- 난방/취사 방식 변경 희망 응답은 소폭 증가 (4.2%p ↑)
- 전반적으로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구분	2011년	2012년
집크기/방수 늘림	42(34.4)	46(34.6)
인테리어 변경	40(32.8)	25(19.5)
위생실(화장실) 개조	18(14.8)	20(15.0)
난방/취사방식 변경	4(3.3)	10(7.5)
수도시설 개조	10(8.2)	8(6.0)
생각해본 적 없음	8(6.6)	23(17.3)
합계	122(100.0)	133(100.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지역별 생활수준 비교: 도(道)

- 지역별 부(富)의 불균형 심화 및 고착화 현상 나타남
- 가장 잘 사는 도-2년 연속 '평안남도' 1순위
(2011년 38.4%→2012년 41.4%)
- 가장 잘사는 도 순위 변화
(2011년: 평남>함북>평북)
(2012년: 평남>함북>양강)
- 가장 못 사는 도-2년 연속 '강원도' 1순위
(2011년 40.0%→2012년 43.2%)
- 가장 못사는 도 순위 변화
(2011년: 강원>함남>황남)
(2012년: 강원>자강>황남)

구분		2011년	2012년
가장 잘 사는 도	1순위	평안남도(38.4)	평안남도(41.4)
	2순위	함경북도(28.6)	함경북도(23.3)
	3순위	평안북도(12.5)	양강도(15.0)
중간 정도 사는 도	1순위	양강도(26.1)	양강도(24.1)
	2순위	함경북도(21.0)	함경북도(22.6)
	3순위	함경남도(10.9)	함경남도(12.8)
가장 못사는 도	1순위	강원도(40.0)	강원도(43.2)
	2순위	함경남도(13.0)	자강도(14.4)
	3순위	황해남도(11.3)	황해남도(12.9)

지역별 생활수준 비교: 시(市)

- 시장 형성, 자본과 상품의 유입 많은 시들로 부(富)의 집중화 현상
- 가장 잘 사는 시-2년 연속 '라선시'
- 가장 잘 사는 시 순위-2년 연속 유지
2011년: 라선>신의주>평성
2012년: 라선>신의주>평성
- 가장 못사는 시-2년 연속 '사리원시'
- 가장 못사는 시 순위 변동
2011년: 사리원>원산>개성
2012년: 사리원>개성>혜산

구분		2011년	2012년
가장 잘 사는 시	1순위	라선(37.1)	라선(34.1)
	2순위	신의주(29.3)	신의주(27.3)
	3순위	평성(13.8)	평성(14.4)
중간 정도 사는 시	1순위	라선(19.7)	청진(22.0)
	2순위	청진(18.9)	평성(19.7)
	3순위	신의주(15.6)	혜산(16.7)
가장 못사는 시	1순위	사리원(30.3)	사리원(26.0)
	2순위	원산(18.3)	개성(18.3)
	3순위	개성(14.7)	혜산(17.6)

가계 소득의 주요 지출 내역

- 2년 연속 식의주 해결에 대부분의 수입 지출
2011년 75.2%→2012년 75.8%
- 주요 지출 순위 2년 연속 유지, 하지만 자녀교육 응답률 소폭 상승하고 뇌물 비중은 소폭
2011년 식의주 해결>장사/사업 밀천>자녀교육&뇌물
2012년 식의주 해결>장사/사업 밀천>자녀교육
- 2012년에는 하위 순위에서 뇌물, 사치품 소비 비중 증가

구분	2011년	2012년
1순위	식의주 문제해결(75.2)	식의주 문제해결(75.8)
2순위	장사 또는 사업밀천(44.2)	장사 또는 사업밀천(38.9)
3순위	자녀 교육(21.8) 뇌물(21.8)	자녀교육(22.7)

식의주 문항과 인구사회학적 문항의 교차분석: 통계적 유의성 분포

- 성별,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과의 교차분석은 통계적 유의성 많지 않음
- 직업, 계층, 소득수준과의 교차분석은 유의성 많은 편
- 소득수준의 경우, 공식수입은 통계적 유의성 없으나, 비공식수입은 유의성 높음
- 주식구성, 고기섭취, 의류구매횟수의 집단간 차이 뚜렷
(카이제곱 검정, * 표시 문항 유의확률(p 값) <0.05)

구분	성별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직업		계층		소득수준(비공식)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하루 식사 횟수	-	-	-	-	-	*	-	-	-	-	*	-	-
주식구성	-	-	-	-	-	*	-	-	-	*	*	*	*
고기 섭취 횟수	-	-	-	*	-	-	-	-	-	-	*	*	*
의류구매 횟수	-	-	*	*	-	-	-	*	-	-	*	*	*
의류 원산지	-	-	-	-	*	*	-	-	-	-	-	-	-
의류 구매처	-	-	-	-	*	*	-	*	*	*	-	-	-
살림집 유형	-	-	-	-	*	-	-	*	-	*	*	*	-
살림집 정한 경로	-	-	-	-	-	-	-	-	-	-	*	-	*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	-	-	-	*	-	-	-	-	-	-	-	-	-
소비지출 내역	-	-	-	-	-	*	-	*	-	-	-	-	*

직업별 식생활 비교

- 장사인 경우 입쌀로만 식사 응답률(61.1%) 가장 높음
- 군인, 사무원, 전문가의 경우 거의 입쌀로만 식사한 응답률 높은 그룹에 포함
- 농민 경우, 곡물 직접 생산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강냉이로만 식사했다는 응답률 100%
(농민은 food entitlement에서 가장 취약한 직업군에 속함)

구분	노동자	농민	사무원	전문가	학생	군인	장사	가정부인
거의 입쌀	28.6	0.0	38.5	36.4	37.5	50.0	61.1	30.4
입쌀:강냉이 반반	33.3	0.0	23.1	27.3	0.0	16.7	16.7	30.4
입쌀:강냉이 3:7	21.4	0.0	15.4	18.2	25.0	33.3	5.6	8.7
거의 강냉이	16.7	100.0	23.1	18.2	37.5	0.0	16.7	30.4

주관적 계층의식별 생활수준 비교: 주식 구성

- 상위 계층일수록 입쌀 비중 많고, 하위 계층일수록 강냉이 비중 늘어남
- 상층 집단 거의 입쌀로만 식사 응답률 80%
- 중층 집단 거의 입쌀 43%, 입쌀과 강냉이 반반 30.1%
- 하층 집단 거의 입쌀 14.3% 불과, 거의 강냉이 식사 48.6%로 가장 많음

구분	상층	중층	하층
거의 입쌀	80.0	43.0	14.3
입쌀: 강냉이 반반	20.0	30.1	14.3
입쌀: 강냉이 3:7	0.0	12.9	22.9
거의 강냉이	0.0	14.0	48.6

주관적 계층의식별 생활수준 비교: 고기 섭취 횟수

- 계층간 격차 매우 심함
- 거의 매일 고기를 먹었다는 응답 상층이 가장 많음
상층20%, 중층4.3%, 하층2.9%
-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먹었다는 응답 상층이 가장 많으나 중층 비중 크게 증가: 상층 40%, 중층29%, 하층5.7%
- 일년에 한두번 정도 고기를 먹었다는 응답은 하층이 가장 많음
상층0%, 중층15.1%, 하층62.9%

구분	상층	중층	하층
거의 매일	20.0	4.3	2.9
일주일에 한두번	40.0	29.0	5.7
한달에 한두번	40.0	51.6	28.6
일년에 한두번	0.0	15.1	62.9

주관적 계층의식별 생활수준 비교: 옷구입 횟수

- 식생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생활의 계층간 격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
- 계절마다 한두벌 정도 구매
상층60%, 중층45.2%, 하층11.4%
- 하층 집단의 경우도 일년에 한두벌 정도 구매 45.7%

구분	상층	중층	하층
계절마다 한두벌	60.0	45.2	11.4
일년에 한두벌	40.0	43.0	45.7
몇 년에 한두벌	0.0	10.8	34.3
남의 옷 얻어입음	0.0	1.1	5.7
구입 필요없음	0.0	0.0	2.9

소득수준별(비공식수입) 생활수준 비교: 주식 비중

- 소득집단 간 입쌀 비중 격차 크게 벌어짐
- 소득수준 높을수록 거의 입쌀로만 식사 응답률 높음
월30만원~50만원 미만 47.4%, 월50만원~100만원 미만 71.4%, 월100만원 이상 84.6%
- 소득수준 낮을수록 강냉이 비중 증가
거의 강냉이로만 식사 월 1만원미만 47.6%, 월1만원~10만원 미만 41.2%, 월10만원~30만원 미만 28.1%, 월30만원~50만원 미만 5.3%

구분	1만원 미만	1만원~10만원 미만	10만원~30만원 미만	30만원~50만원 미만	50만원~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거의 입쌀	14.3	11.8	3.1	47.4	71.4	84.6
입쌀: 강냉이 반반	19.0	17.6	46.9	31.6	21.4	7.7
입쌀: 강냉이 3:7	19.0	29.4	21.9	15.8	0.0	3.8
거의 강냉이	47.6	41.2	28.1	5.3	7.1	3.8

소득수준별(비공식수입) 생활수준 비교: 고기섭취 횟수

- 소득수준이 월50만원 이상이 되어야 거의 매일 고기 섭취 가능해짐
- 소득수준이 월30만원~50만원 미만 집단 역시 10명중 5명만이 한달에 한두번 정도 고기 섭취 가능함
- 소득수준 월10만원 미만인 경우 10명중 5명은 일년에 한두번만 고기 섭취 가능함
- 소득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섭취량은 크게 늘어나지 못함
(월30만원 이상 소득집단 비중 2011년 22%, 2012년 45.8%)

구분	1만원 미만	1만원~10만원 미만	10만원~30만원 미만	30만원~50만원 미만	50만원~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거의 매일	0.0	0.0	0.0	0.0	14.3	15.4
일주일에 한두번	4.8	11.8	18.8	31.6	14.3	50.0
한달에 한두번	38.1	29.4	56.3	57.9	64.3	34.6
일년에 한두번	87.1	58.8	25.0	10.5	7.1	0.0

소득수준별(비공식수입) 생활수준 비교: 옷 구입 횟수

- 식생활에 비해 의생활에서는 소득집단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소득수준이 월 10만원 이상이면 10명중 4명은 계절마다 한두벌 옷 구입 가능함
- 소득수준이 월 10만원 미만이면 10명중 4명은 일년에 한두벌 정도 옷 구입 가능함

구분	1만원 미만	1만 원 ~10만원 미만	10만원~30만원 미만	30만원~50만원 미만	50 만 원 ~100 만 원 미만	100만원 이상
계절마다 한두벌	9.5	17.6	43.8	31.6	21.4	76.9
일년에 한두벌	42.6	41.2	40.6	63.2	64.3	23.1
몇 년에 한두벌	38.1	35.3	15.6	5.3	14.3	0.0
남한테 얻어입음	9.5	0.0	0.0	0.0	0.0	0.0
살 필요없음	0.0	5.9	0.0	0.0	0.0	0.0

계층별 생활 구성요건(255명 대상)

- 상층의 생활 구성요건
 - 하루세끼 식사 가능(86.7%), 거의 입쌀로만 식사(81.3%),
 - 고기는 거의 매일 먹거나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섭취 (81.3%)
 - 계절마다 한두벌 정도의 옷 구입(81.3%)
 - 소득수준은 월 100만원 이상이 되어함(50%)
- 중층의 생활 구성요건
 - 하루세끼 식사 가능(86.5%), 거의 입쌀이거나 강냉이반의 주식 구성(73.7%)
 -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번 또는 한달에 한두번 섭취(81.2%)
 - 계절마다 한두벌 또는 일년에 한두벌 옷 구입(84%)
 - 소득수준은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58.5%)
- 하층의 생활 구성요건
 - 대다수가 하루 세끼 또는 두끼 식사는 가능하나(89%), 강냉이7할 또는 거의 강냉이로만 식사함(66.7%)
 - 고기는 일년에 한두번 섭취(56%), 옷은 일년 또는 몇년에 한두벌 구입(76.4)
 - 소득수준은 10만원 미만(62.6%)

요약 및 결론

- 김정은 정권 1년인 2012년 북한주민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좋아진 방향으로 나타남
 - 양적 증가는 나타나지만, 질적 향상은 크게 변동 되지 않음
 - 하루 식사 횟수 응답률은 증가했으나, 주식의 구성과 고기 섭취 횟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음
 - 농민은 식량 직접 생산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악계층
- 의생활은 2011년과 마찬가지로 집단간 격차가 가장 적게 나타남
 - 국내 소비재산업의 침체로 중국산 비중이 절대적임
 - 남북관계 악화 지속으로 인해 남한산 의존도 감소하고 중국의존도 증가
- 소득수준 향상으로 아파트 거주자 증가, 주택시장 더욱 활성화됨
- 지역별 부(富) 불균형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현상 뚜렷
 - 시장형성, 자본과 상품의 유입이 많은 지역으로 부(富) 집중화
 - 농촌지역, 중국/러시아 접경지대와 먼 지역일수록 빈곤
- 가계수입의 지출에서 식의주 해결이 2년 연속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소득수준 향상으로 사치품 소비, 뇌물 등의 비중도 증가

감사합니다!

북한주민의 삶과 의식

- 발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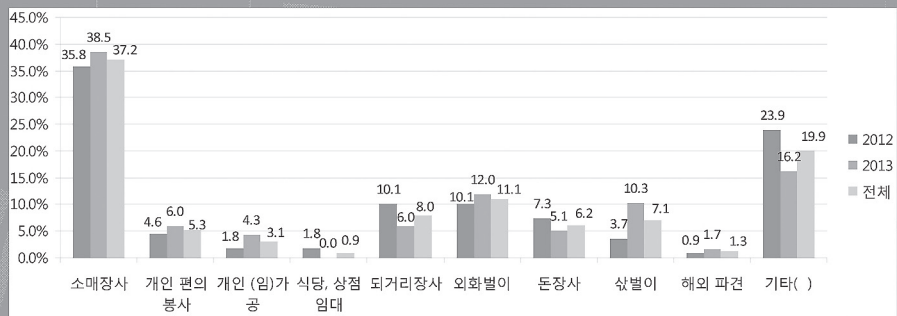
북한사회의 시장화와 소득분화

장용석 (IPUS 선임연구원)

북한사회의 시장화와 소득분화

1. 북한사회의 시장화
2. 북한사회의 소득분화
3. 소결론

기-1. 북한거주시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은 일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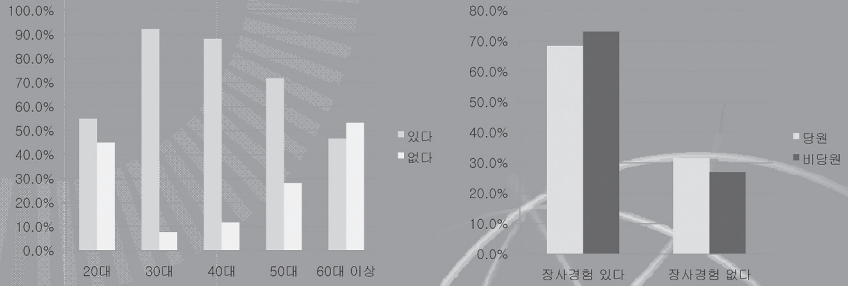
○ 2012년 조사와 비교하면

- * - 소매장사와 샷벌이 비중이 다소 증가/되거리장사 비중은 약간 감소

○ 전체적으로

- 소매장사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외화벌이, 되거리장사, 샷벌이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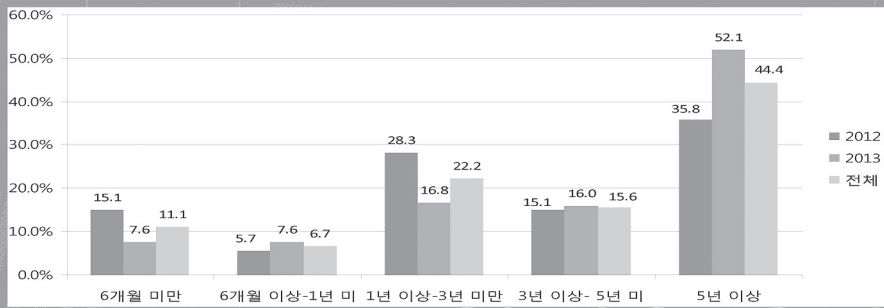
1-1-1. 연령대.당원여부별 장사 경험



구분	있다	없다	전체 (261명)
10대	33.3%	66.7%	3
20대	54.9%	45.1%	91
30대	92.3%	7.7%	52
40대	88.2%	11.8%	68
50대	71.9%	28.1%	32
60대 이상	46.7%	53.3%	15

구분	장사 경험 있다	장사 경험 없다	전체 (261명)
당원	68.4%	31.6%	38
비당원	73.1%	26.9%	223

1-1-2.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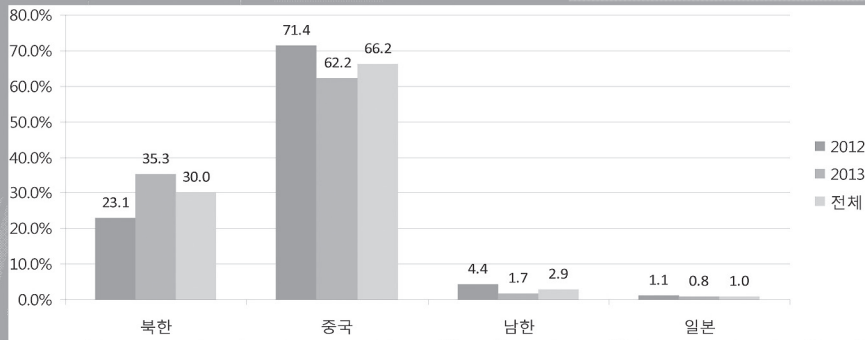
0 2012년 조사와 비교하면

- 6개월 미만과 1년 이상~3년 미만이 다소 감소/5년 이상이 크게 증가
- 3년 이상이 50.9%에서 68.1%로 크게 증가

0 전체적으로

- 3년 이상이 60.0%를 차지, 동일 사업 지속기간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

1-2. 장사물건이나 사업용 원자재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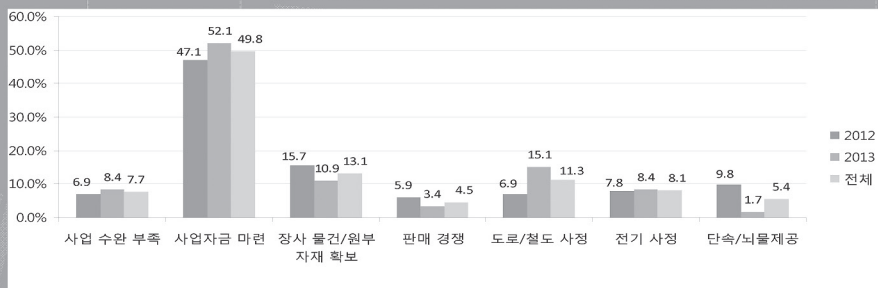
○ 2012년 조사와 비교하면

- 남한산과 함께 중국산 비중이 다소 줄고 북한산 비중이 크게 증가

○ 전체적으로

- 중국산의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1-3. 주된 수입원 종사시 가장 큰 애로사항-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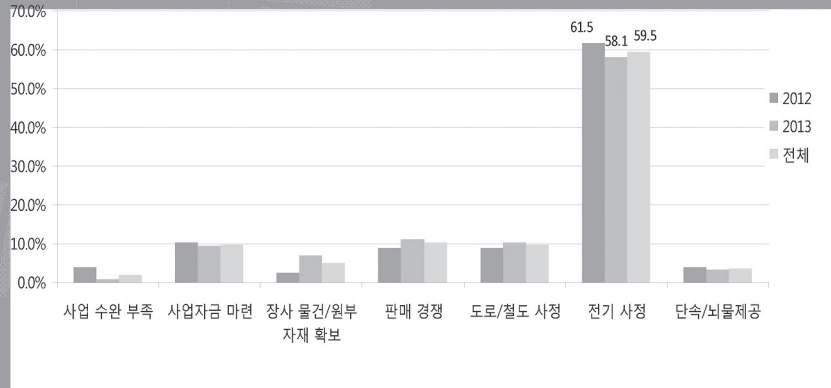
○ 2012년 조사와 비교하면

- 사업자금 마련과 도로.철도 문제가 다소 증가
- 장사물건.원부자재 확보와 단속.뇌물제공 문제는 다소 감소

○ 전체적으로

- 사업자금 마련이 절반정도, 장사물건.원부자재 확보와 도로.철도 등 인프라 순
- 상대적으로 단속이나 뇌물제공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

1-3-1. 주된 수입원 종사시 가장 큰 애로사항-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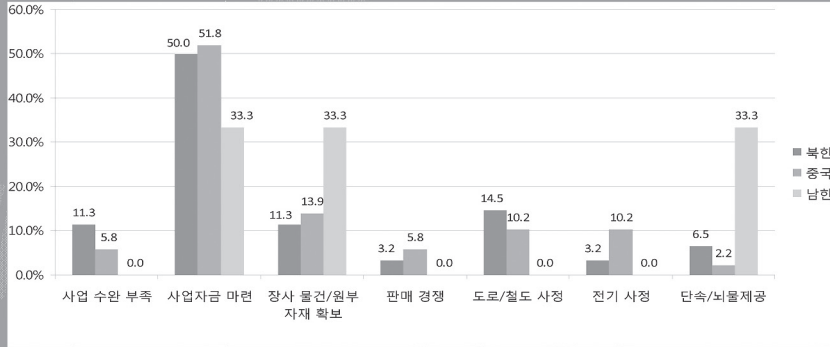


○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며
○ 전체적으로 60% 정도가 열악한 전기사정을 지적

1-3-2. 주된 수입원별 애로사항

구분	사업 수완 부족	사업자금 마련	장사 물건/원부자재 확보	판매 경쟁	도로/철도 사정	전기 사정	단속/뇌물제공	전체 (2012-13년도/217명)	
소매장사	7.3%	64.6%	14.6%	1.2%	6.1%	2.4%	3.7%	100.0%	82
개인 편의봉사	0.0%	50.0%	8.3%	0.0%	0.0%	41.7%	0.0%	100.0%	12
개인 (임)가공	0.0%	14.3%	14.3%	0.0%	14.3%	57.1%	0.0%	100.0%	7
식당, 음식점 대운영	0.0%	100.0%	0.0%	0.0%	0.0%	0.0%	0.0%	100.0%	2
퇴거리장사	5.6%	55.6%	5.6%	11.1%	16.7%	0.0%	5.6%	100.0%	18
외화별이	8.0%	24.0%	12.0%	20.0%	32.0%	0.0%	4.0%	100.0%	25
돈장사	0.0%	69.2%	15.4%	0.0%	0.0%	0.0%	15.4%	100.0%	13
상별이	18.8%	37.5%	18.8%	6.3%	6.3%	6.3%	6.3%	100.0%	16
해외파견 노력근무	33.3%	33.3%	0.0%	0.0%	33.3%	0.0%	0.0%	100.0%	3
기타	10.3%	35.9%	12.8%	2.6%	15.4%	12.8%	10.3%	100.0%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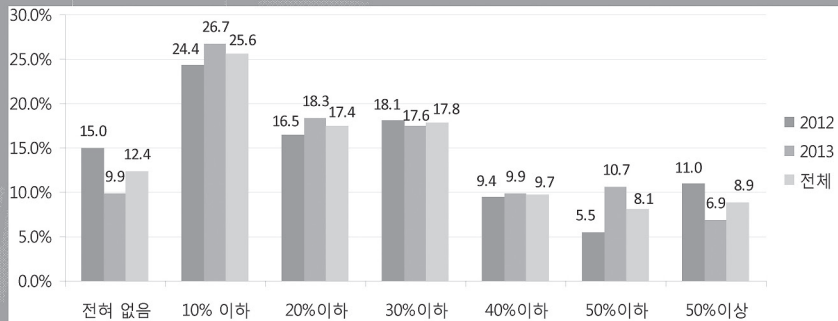
기-3-3. 장사물건.원부자재 출처별 애로사항



0 전체적으로

- 북한산을 주로 취급하는 경우 사업자금 > 도로.철도 순
- 중국산을 주로 취급하는 경우 사업자금 > 물건.원부자재 확보 순
- 남한산을 주로 취급하는 경우 사업자금 = 물건.원부자재 확보 = 단속.뇌물

기-3-4. 수입 중 뇌물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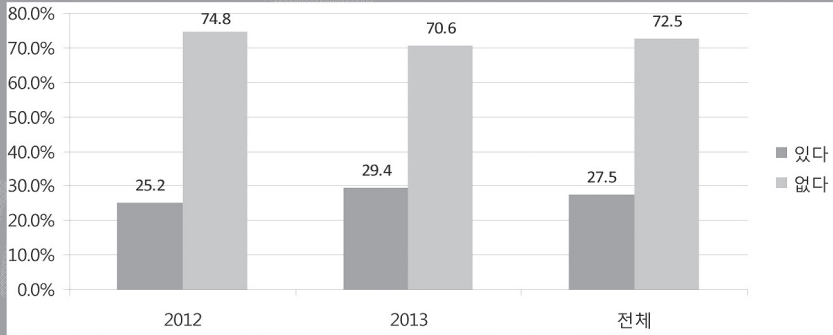
0 2012년 조사와 비교하면

- 전혀 없다 크게 감소/50% 이상 다소 감소/40-50% 비중 다소 증가
- 수입의 10%나 20% 이하 제공이 40.9% -> 45.0%로 다소 증가

0 전체적으로

- 87.6%가 뇌물 제공/수입의 20% 이하 제공 43.0%, 20% 이상 제공 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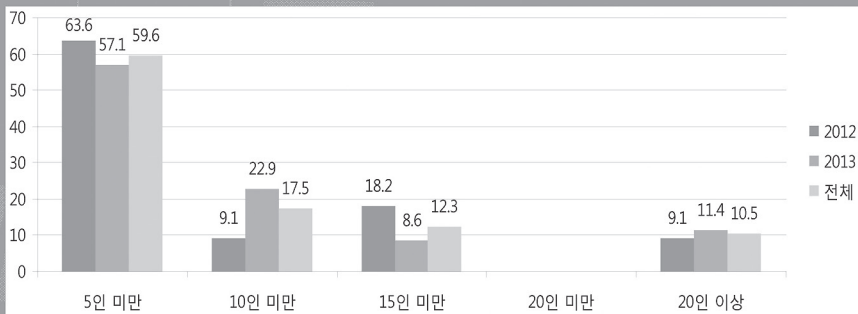
* 1-4. 주된 수입원 종사시 타인고용 여부



* 0 2012년 조사와 비교하면

- 고용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약간 증가하였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
- 0 전체적으로
- 30%미만이 타인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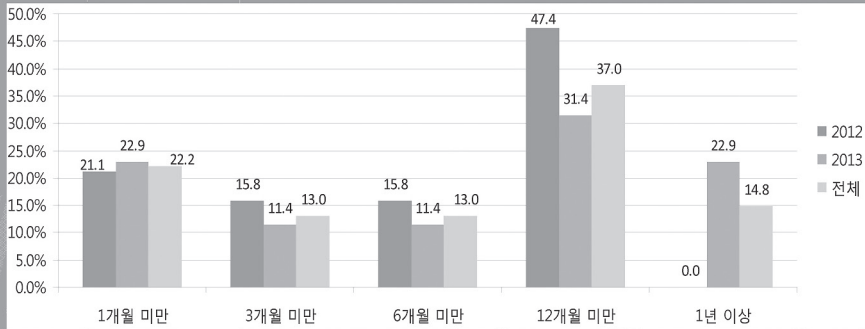
* 1-4-1. 주된 수입원 종사시 연간 고용인원



* 0 2012년 조사와 비교하면

- 5인 미만, 10~15인 미만이 감소하고 5~10인 미만은 증가
- 0 전체적으로
- 5인 미만이 60% 정도를 차지하여 사업이 매우 영세한 수준임을 시사

1-4-2. 주된 수입원 종사시 타인고용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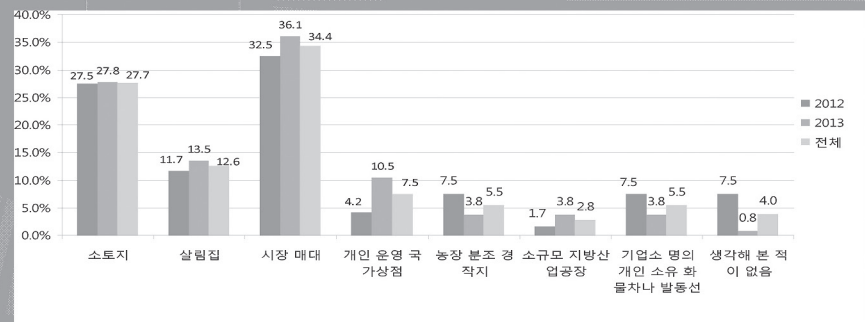
○ 2012년 조사와 비교하면

- 1년 이상이 크게 증가
- 12개월 미만은 크게, 6개월과 3개월 미만은 약간 감소

○ 전체적으로

- 1년 이상이 15%도 안되며, 6개월 미만이 거의 절반(48.2%)을 차지

1-5. 우선적 사유화 대상 인식(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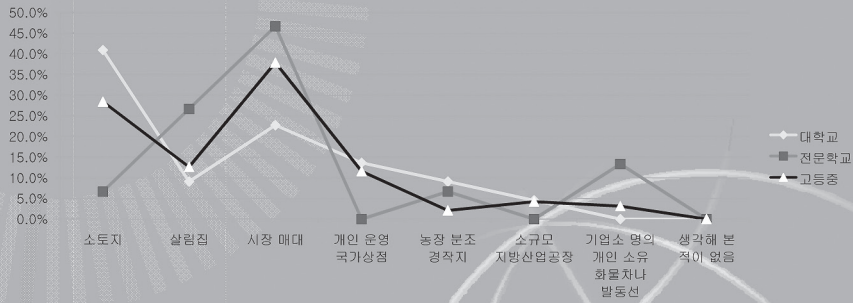
○ 2012년 조사와 비교하면

- 개인운영국가상점/시장매대/살림집이 증가
- 생각한 적 없음/농장분조경작지/기업명의 개인 자산 등 감소

○ 전체적으로

- 시장매대/소토지/살림집에 대한 사유화 인식이 74.7%를 차지

1-5-1. 학력별 사유화 우선 대상-1순위(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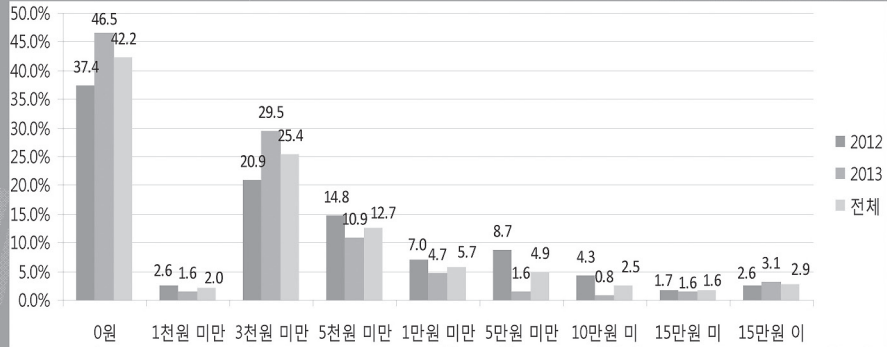


구분	소토지	살림집	시장 매대	개인 운영 국가상점	농장 분조 경작지	소규모 지방 산업공장	기업소 명의 개인 소유 화물차나 발동선	생각해 본 적이 없음	전체
대학교	40.9%	9.1%	22.7%	13.6%	9.1%	4.5%	0.0%	0.0%	100.0%
전문학교	6.7%	26.7%	46.7%	0.0%	6.7%	0.0%	13.3%	0.0%	100.0%
고등중	28.4%	12.6%	37.9%	11.6%	2.1%	4.2%	3.2%	0.0%	100.0%

1-5-2. 직업별 사유화 우선 대상-1순위(2013)

구분	소토지	살림집	시장 매대	개인 운영 국가상점	농장 분조 경작지	소규모 지방 산업공장	기업소 명의 개인 소유 화물차나 발동선	생각해 본 적이 없음	전체 (2012-13년도/251명)
노동자	30.5%	12.2%	32.9%	11.0%	3.7%	3.7%	3.7%	2.4%	100.0% / 82
농민	42.9%	14.3%	14.3%	0.0%	14.3%	7.1%	0.0%	7.1%	100.0% / 14
사무원	25.0%	15.0%	25.0%	10.0%	20.0%	0.0%	5.0%	0.0%	100.0% / 20
전문가	19.0%	28.6%	19.0%	4.8%	9.5%	0.0%	4.8%	14.3%	100.0% / 21
학생	37.5%	12.5%	12.5%	12.5%	6.3%	12.5%	6.3%	0.0%	100.0% / 16
군인	36.4%	9.1%	36.4%	0.0%	0.0%	9.1%	0.0%	9.1%	100.0% / 11
외화별이	0.0%	0.0%	40.0%	0.0%	0.0%	0.0%	40.0%	20.0%	100.0% / 5
장사	16.1%	9.7%	58.1%	3.2%	3.2%	0.0%	9.7%	0.0%	100.0% / 31
가정부인	23.1%	12.8%	53.8%	5.1%	2.6%	0.0%	0.0%	2.6%	100.0% / 39
무직,기타	33.3%	0.0%	16.7%	16.7%	0.0%	0.0%	25.0%	8.3%	100.0% / 12

2-1.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월평균 가구생활비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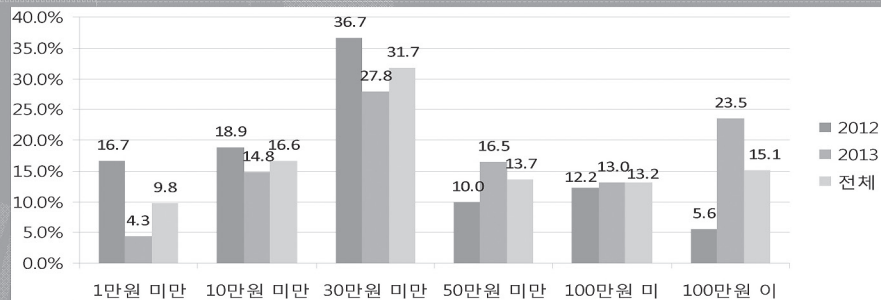
○ 2012년 조사와 비교하면

-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1천~3천원 미만인 경우(노동자) 크게 증가
- 대신 1만원 이상은 17.4%에서 7.0%로 감소

○ 전체적으로

- 생활비 미지급이 42.2%/1만원 이상은 11.9%를 차지

2-2. 장사 또는 부업을 통한 가구 수입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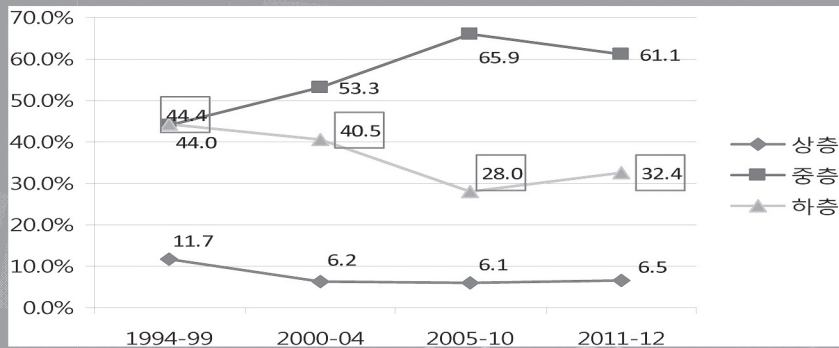
○ 2012년 조사와 비교하면

- 1만원 미만이 크게, 10만원과 30만원 미만도 다소 감소
- 대신 30만원 이상은 27.8%에서 53.0%로 크게 증가

○ 전체적으로

- 30만원 미만이 58%로 다수를 차지
- 1만원 미만 9.8%, 1만원대 16.6%, 10만원대 58.5%, 100만원대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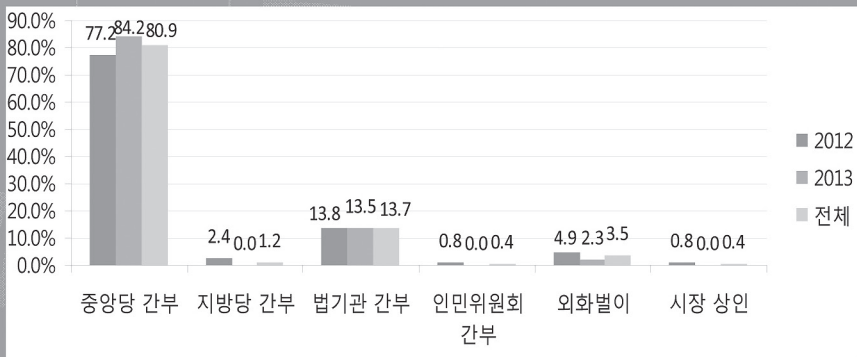
2-3. 북한거주시 시기별 생활수준



※ 0 전체적으로

- 상층의 비중이 2000-04년 이후 6%대를 일정하게 유지
- 하층의 비중이 감소하고 중층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 2005-10년의 경우 2013년에만 조사

2-4-1.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직업-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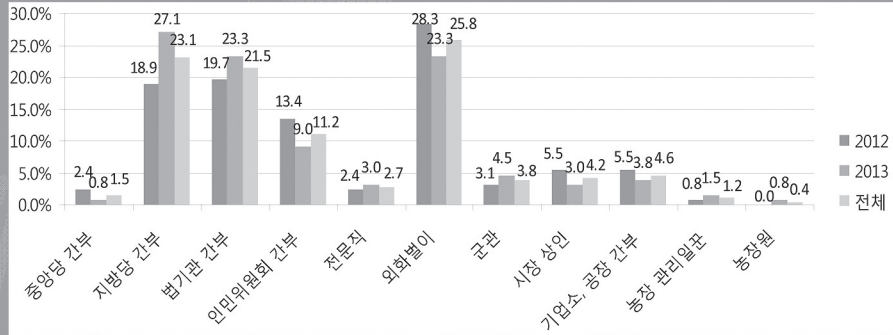
※ 0 2012년 조사와 비교하면

- 중앙당 간부라는 응답이 약간 증가

0 전체적으로

- 중앙당 간부 > 보위부, 안전부, 검찰기관 등 법기관 간부 순

2-4-2. 북한에서 중간 정도 사는 직업-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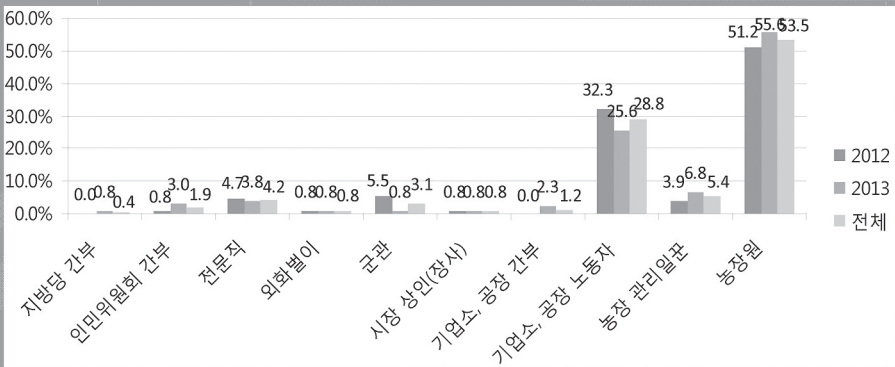
* 0 2012년 조사와 비교하면

- 지방당간부와 법기관 간부 증가/외화벌이와 인민위원의 간부 감소

0 전체적으로

- 지방당 간부>외화벌이>법기관 간부>인민위원의 간부 순

2-4-3. 북한에서 가장 못 사는 직업-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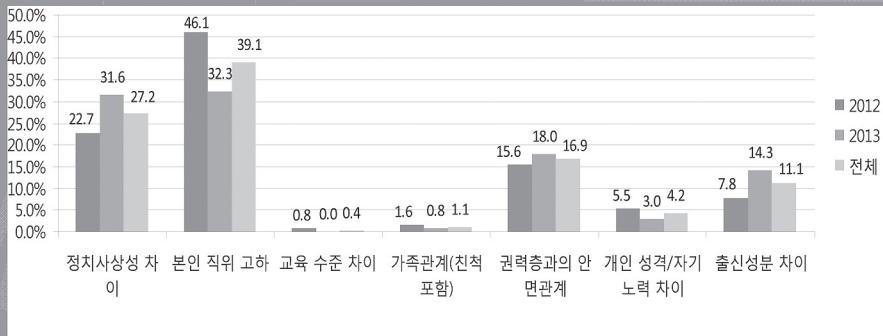
* 0 2012년 조사와 비교하면

- 기업소.공장노동자와 군관은 약간 감소/농민은 약간 증가

0 전체적으로

- 농장원(53.5)>기업소.공장노동자>농장관리일꾼 순

2-5. 경제적 계층 분화 이유-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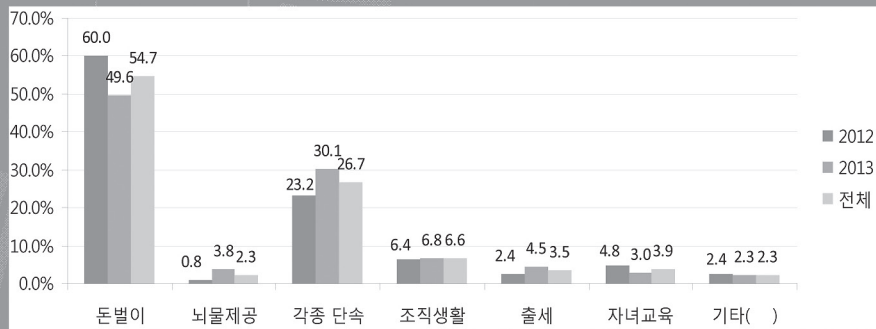
○ 2012년 조사와 비교하면

- 정치사상성과 출신성분, 안면관계 증가/본인 직위 크게 감소
- 직업으로 보면 노동자·농민·장사중사자들의 인식이 변화

○ 전체적으로

- 본인 직위 고하 > 정치사상성 > 안면관계 > 출신성분 순

2-6. 일상의 고민과 걱정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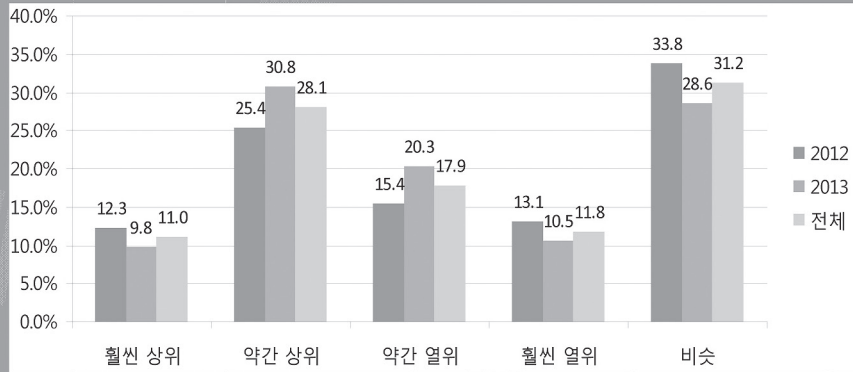
○ 2012년 조사와 비교하면

- 각종 단속에 대한 걱정 다소 증가/돈벌어야 하는 걱정 크게 감소

○ 전체적으로

- 돈벌어야 하는 걱정 > 각종 단속 > (기타 조직생활) > 자녀교육 > 출세 순

2-7-1. 북한거주시 친척과의 생활 수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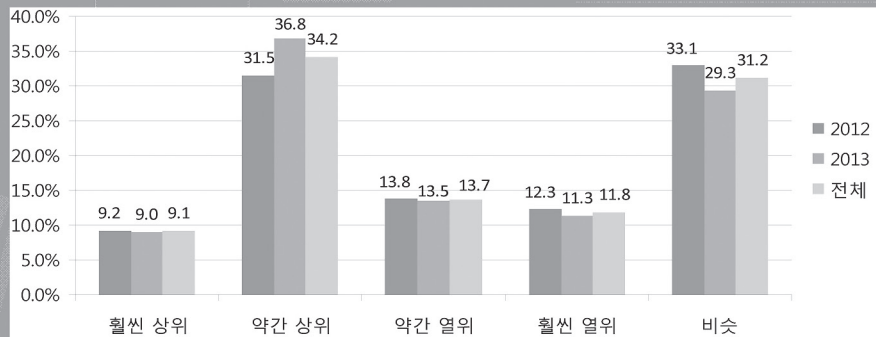
○ 2012년 조사와 비교하면

- 상위 응답 37.7% → 40.6% / 열위 응답 28.5% → 30.8%로 큰 변화 없음

○ 전체적으로

- 상위 응답 39.2% / 열위 응답 29.7% / 비슷하다는 응답 31.2%

2-7-2. 북한거주시 이웃과의 생활 수준 비교



○ 2012년 조사와 비교하면

- 상위 응답 40.8% → 45.8로 약간 증가

○ 전체적으로

- 상위 응답 43.3% / 열위 응답 25.5% / 비슷하다는 응답 31.2%

- 친척보다 이웃관계에서 자신이 더 잘 산다는 인식이 클 가능성

3-1. 소결론-2012년과 2013년 조사 비교

0 시장와

- 사적 경제활동에서 동일한 사업 지속 기간이 늘어남
- 사적 경제활동의 타인고용 규모에서 5~10인 미만이 증가(5인 미만 등 감소)
- 사적 경제활동에서 타인고용 기간이 증가(1년 이상 급증)
- 사적 경제활동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사업자금 마련 문제 지적이 증가
- 장사물건이나 원부자재 출처에서 복안산이 증가
- 뇌물제공이 다소 증가, 뇌물 크기는 다소 감소
- 사유와 대상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다소 감소

0 소득분와

- 국가의 생활비 미지급과 1천~3천 미만 지급 세대 급증
- 가장 잘사는 직업에서 중앙당 간부, 중간에서 지방당 및 법기관 간부 증가
- 중간 정도 사는 직업에서 외와별이와 인민위원외 간부 감소
- 경제적 계층분와 이유에서 정치사상성, 출신성분, 안면관계 증가
- 일상의 고민거리에서 각종 단속에 대한 걱정이 다소 증가

3-2. 소결론-전체(2012-2013년 통합)

0 시장와

- 사적 경제활동에서 유통부문이 절반이상. (임)가공(3.1) 등 생산부문은 미미
- 사적 경제활동의 최대 장애는 사업자금문제(그 다음이 전기사정)
- 사적 경제활동에서 타인고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 미만
- 사적 경제활동에서 타인고용 기간의 절반 가량이 6개월 미만
- 사적 경제활동에서 타인고용 규모는 5인 미만이 59.6%를 차지
- 사유와 대상으로 시장매대, 소토지, 살림집이 약 3/4을 차지
- * 국가상점, 경작지, 소규모 지방산업공장에 대한 인식은 15.8%에 불과

0 소득분와

-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한 세대가 42.2%로 다수 차지
- 생활수준은 90년대 중반에 비해 상승 일정수준 지속. 아층 감소. 중층 증가
- 가장 잘사는 직업: 중앙당간부, 중간: 외와별이. 지방당 및 법기관 간부
- 경제적 계층분와 이유: 본인직위고아>정치사상성>안면관계>출신성분 순
- 친척보다 이웃관계에서 자신이 더 잘 산다는 인식이 클 가능성

북한주민의 삶과 의식

- 발표 3

북한주민의 대남인식과 북한실태 변화

김병로 (IPUS HK교수)

북한주민의 대남인식과 북한실태 변화

김병로 (IPUS HK교수)

I. 열며

통일연구를 진행하는데서 북한주민의 대남인식과 북한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주민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그런 점에서 북한주민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특히 통일의 미래대안으로 여기고 있는가의 여부에 의해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실제로 경제와 사회 영역에서 주민들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가, 주민들은 체제와 정권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가, 문화접촉과 의식변화는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도 중요하다. 통일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기 위해 북한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 사회 안의 개혁과 의식변화도 필요하지만 북한실태와 주민의 의식변화를 가늠해 보면 통일이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실태와 주민의식의 변화를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북한에서 산출하는 공식 통계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그러한 자료들이 간혹 입수되기는 하지만 신빙성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로동신문이나 저널의 논문, 소설도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데일리NK나 임진강 등의 기관에서 북한 내 정보소스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 통화하며 확보하는 자료와 탈북자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한 정세분석 자료라 긴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통일연구원, 국방연구원과 같은 권위 있는 북한 연구기관에서는 탈북자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북한실태에 대한 분석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많은 자료들은 여러 유익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종합화가 어렵고 비교분석의 근거도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와 한계를 고려하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북한주민통일의식조사는 북한연구의 과학화와 자료의 종합화라는 측면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하나원 교육생들을 표본으로 하였지만, 2011년부터 북한의 실상을 가장 최근에 경험한 탈북자, 즉 북한을 탈출한지 1년~1년 4개월 미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체제를 이탈했다는 점, 그리고 아직도 법적으로 적대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지역으로 입국했다는 점 때문에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5년 혹은 3년 동안 축적한 자료의 해석과 활용에서 신중성을 기한다면 북한실태와 의식변화를 연구하는 데서 매우 유익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2013년 탈북자 조사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5월 사이에 북한을 탈출한 북한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대부분의 조사대상자가 2012년에 북한을 떠난 사람들이다. 2012년은 김일성 출생 100년을 맞는 시기로 북한이 수년 전부터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의미를 부여한 시기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2011.12.17)한 이후 2012년부터 김정은 정권이 집권한 시가이기도 하여 김정은 정권의 정책과 주민들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조사결과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 시기에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가를 평가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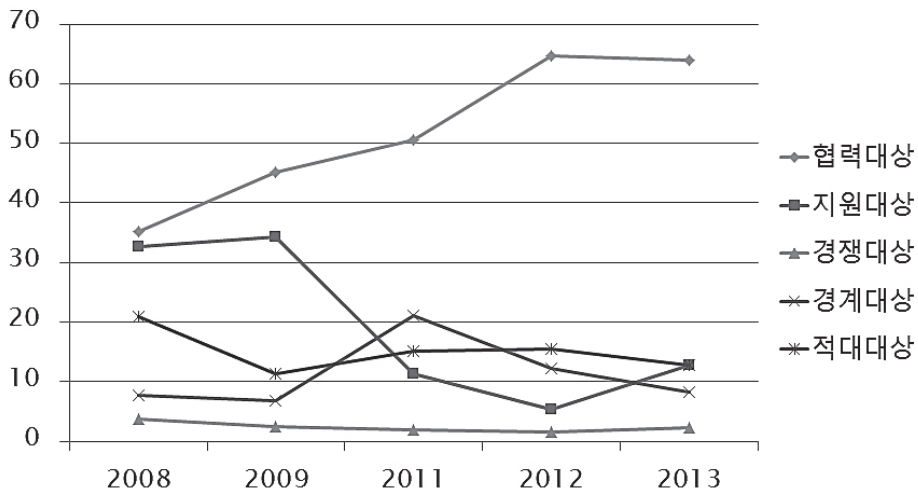
Ⅱ.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1. 남한에 대한 인식

북한주민들에게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 “경계해야 할 대상,”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 결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력대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63.9%로 가장 많고, ‘지원대상’ 12.8%, ‘적대대상’ 12.8%, ‘경계대상’ 8.3%, ‘경쟁대상’ 2.3%가 뒤를 이었다. 최근 몇 년간 남북한이 치명적인 무력충돌과 전쟁위협, 삼리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주민은 남한을 여전히 협력대상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이 흥미로운 대목이며, ‘경계대상’은 감소(20.6%→12.7%→8.3%)하고 ‘지원대상’ 인식(5.6%→12.8%)은 늘어났다. 2008년 이후 남북한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었음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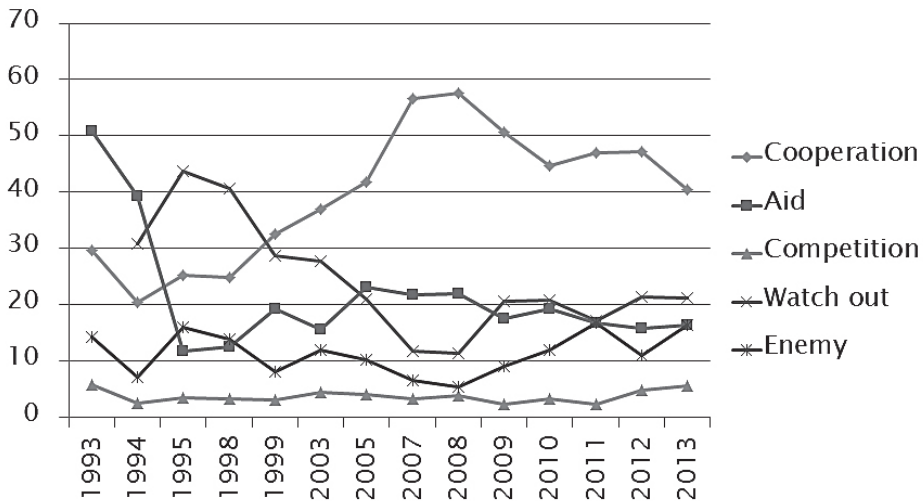
불구하고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한 북한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나 2013년에는 협력대상이라는 의식과 적대대상이라는 의식은 주춤한 반면, 지원대상 인식은 늘어나고 경계대상 인식은 감소하였다. 한마디로 2013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경계심리가 이완되고 지원대상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목할 현상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12년부터 남한에 대한 ‘적대대상’ 인식이 ‘경계대상’ 인식보다 높아졌고 2013년에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증가일로에 있던 대남 ‘적대의식’은 감소세(15.2%→12.8%)로 돌아섰고 경계심리도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의 대북인식이 다시 부정적으로 변화된 흐름과는 상반된 현상이다. 남한주민의 대북인식에서 ‘협력대상’인식은 47.1%→40.4%로 줄고 ‘적대대상’ 인식은 10.9%→16.4%로 늘어나 작년에 새롭게 조성되었던 대북 긍정인식이 2013년에 다시 부정적 인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림 2〉 남한주민의 대북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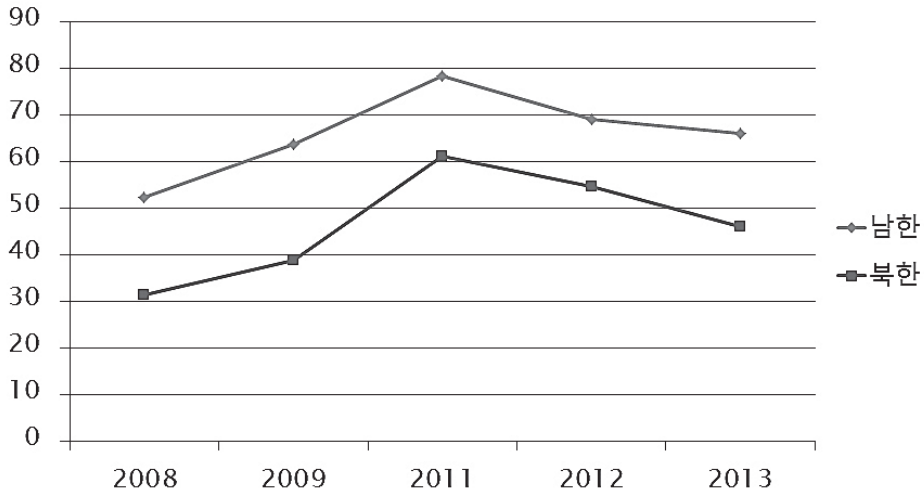
2. 안보불안에 대한 인식

1)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많이 있다'(22.6%), '약간 있다'(23.3%)를 합하여 45.9%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31.4%에서 2009년 39.1%로 증가했고 2011년에 61.1%로 급증한 이후 2012년에 54.6%로 낮아졌고 올해 다시 45.9%로 낮아졌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고조되었던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해 북한주민들은 긴장과 대립의 기운이 다소 누그러진 듯 보인다.

이는 남한주민의 안보불안 의식과도 비슷한 추세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8년 이후 52.2%(08년)→63.6%(09년)→67.3%(10년)→78.3%(11년)로 가파르게 상승하던 남한주민의 북한의 무력도발 우려가 2012년에 68.9%, 2013년에 66.0%로 다소 완화된 것과 유사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남북간 군사적 긴장 고조시 상대에 의한 무력도발 불안감이 남북한 사이에 비슷한 양상으로 고조되고, 반대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남북한에서 동일하게 안보불안 의식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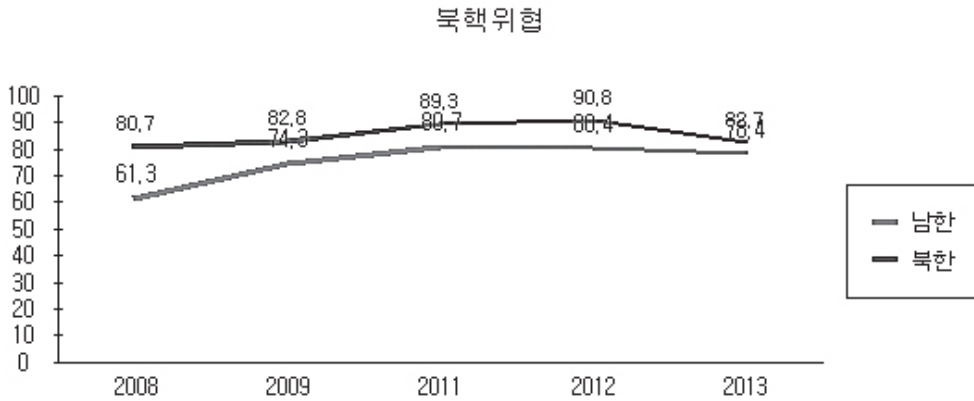
〈그림 3〉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2) 북핵위협

북한주민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63.9%가 “매우 위협적일 것”이라고 응답했고 18.8%는 “다소 위협적인 것”이라고 답하여 82.7%가 ‘위협적일 것’이라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이는 작년의 90.8%에 비해 8.1%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 핵무기의 위력에 대해 평가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남 및 대미 방어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인식하도록 하는 대주민 학습효과가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한주민들이 북한 핵으로부터 느끼는 위협(78.4%)보다 4.3% 포인트 높은 것으로, 북한주민들은 남한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핵의 위력과 파괴력을 여전히 더 높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북핵위협인식 (남북한비교)



상승일로에 있던 대남협력의식이 2013년에 다소 주춤하였으나 지원대상 의식이 높아졌고 경계심이나 적개심은 낮아졌다. 남한발 안보불안감도 낮아졌으며 북핵위협도는 조금 낮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는 2012년 4월 개정헌법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공식화하고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조치들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남협력의식이 다소 주춤한 것은 남북한간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어 북한이 남한에 대해 기존의 모든 합의문서를 무효화하고 정전협정도 백지화한다고 선언하고 개성공단 폐쇄 위협의 현실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발 안보불안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북한당국의 선전과 주장대로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주민들의 안보불안이 상당히 해소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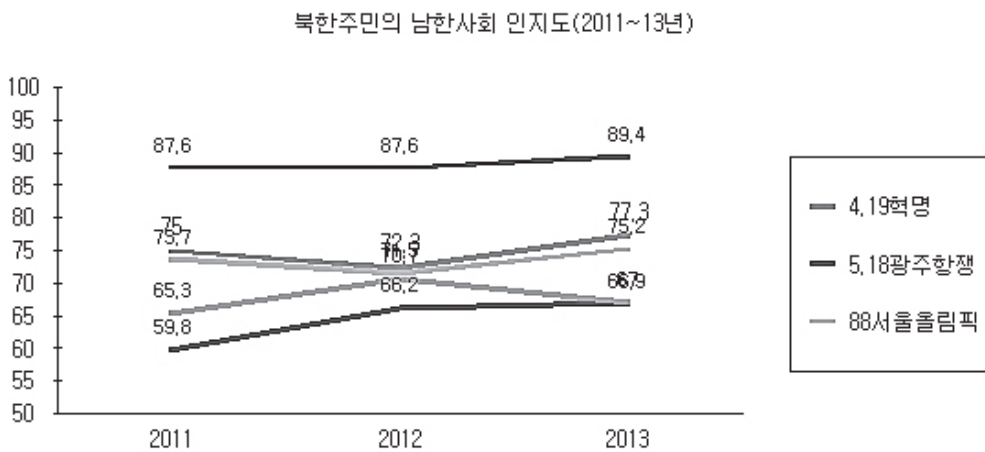
3. 대남 인지도

1) 남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그림 5〉은 2011~2013년 시기 북한주민의 남한 인지도를 표시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에 대해 시기별로 남한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북한주민들은 1980년 5.18 광주항쟁(89.4%)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으로 4.19 혁명(77.3%)과

88서울올림픽(75.2%), 2002 월드컵(67.0%),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66.9%) 등의 순으로 알고 있었다. 5.18 광주민주화 사건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유는 북한이 ‘광주항쟁’, ‘5.18정신’ 등의 담론으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¹⁾ 4.19혁명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88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축구에 관한 소식은 공식채널로 접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며 사회적 관계를 통해 습득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5〉 북한주민의 대남 인지



2013년 북한주민의 대남 인지도 평균은 75.2%였다. 이는 작년의 70.8%에서 4.4% 포인트 높아진 것이며 2011년의 72.3%보다 높은 수치다.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를 남한주민의 대북인지와 절대수치로 비교할 근거는 마땅치 않지만, 남한주민들에게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등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2012년 60.6%로 북한보다 낮게 나타났다.²⁾ 북한주민들의 대남 인지도가 상당 부분 북한당국의 대남선전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88서울올림픽과 2002월드컵에 대한 사실을 각각 75.2%, 67.0%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주민들이 공식매체 이외의 다양한 방식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남한의 소식을

1) 『민조조선』, “광주항쟁정신 계승! 공안탄압분쇄! 이명박정권 퇴진!” 2009년 5월 19일, 『민주조선』, “자유의 광주 만세!” 2010년 5월 18일, 『민주조선』, “5.18의 정신을 이어” 2011년 5월 18일, 김병로·최경희, “남북한 주민의 통일인식 비교 분석,” 『통일과평화』, 4집 1호(2012년 상반기), pp. 125~126 재인용.
 2) 남한주민들은 북한의 주체사상(78.2%)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천리마운동(72.4%), 아리랑축전(60.9%), 고난의행군(58.3%), 선군정치(58.1%), 장마당(35.8%) 순으로 알고 있었고 평균인지도는 60.6%였다. 박명규 외, 『2012 통일인식조사』(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2), p. 63.

접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25년이 지난 서울올림픽의 인지수준은 75%인데 비해 10년 정도 경과한 월드컵과 촛불집회는 67% 수준으로 조금 낮긴 하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공식 경로를 통해 남한의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는 경우 정보유입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 결과적으로 정보의 전달을 차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남북간 차이, 이질성 인식

북한주민들은 남한과 북한간에 여러 면에서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작년과 비교할 때 2013년의 경우, 선거방식에서는 95.4%→97.7%, 생활수준은 94.7%→97.7%, 역사인식은 92.3%→92.5%, 언어사용은 95.4%→94.0%, 생활풍습은 83.1%→88.7%, 가치관에서는 86.9%→91.0%가 남북한간의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한과의 이질성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이러한 심각한 차이 인식은 2008년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이질감이 조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간의 이러한 이질성은 남한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다. 남한주민들의 경우는 2012년에 남북간의 선거방식(93.4%), 생활수준(95.3%), 법률제도(88.3%), 언어사용(88.2%), 생활풍습(85.8%), 가치관(92.5%)로 북한주민들이 느끼는 이질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남한의 대북지원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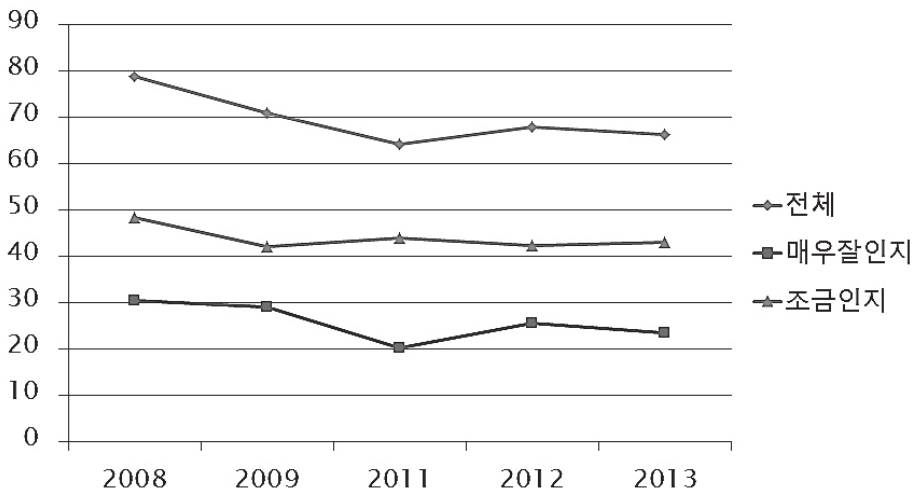
1) 대북지원 인지도

남한사회에서 남남갈등의 쟁점이 되고 있는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북한주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잘 알고 있다’(23.3%), ‘조금 알고 있다’(42.9%)를 합하여 총 66.2%가 남한의 대북지원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별로 알 알지 못하고 있다’(25.6%),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8.3%)를 포함하여 총 33.9%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주민들 중 남한의 대북지원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8.3%로 매우 소수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와 ‘모르고 있다’의 비율은

66.34로 약 21, 즉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2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주민의 대북지원 인지도의 변화를 시기별로 보면 2008년의 78.8%에서 2009년 70.8%, 2011년 이후 64.1%→67.7%→66.2%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북지원 인지도가 60% 중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남북관계의 단절로 대북지원 관련 활동이 감소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즉 대북지원 활동이 실제적으로 중단되고 교류와 거래가 단절됨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 대북지원 관련 소식이나 소문을 들을 기회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림 6〉 대북지원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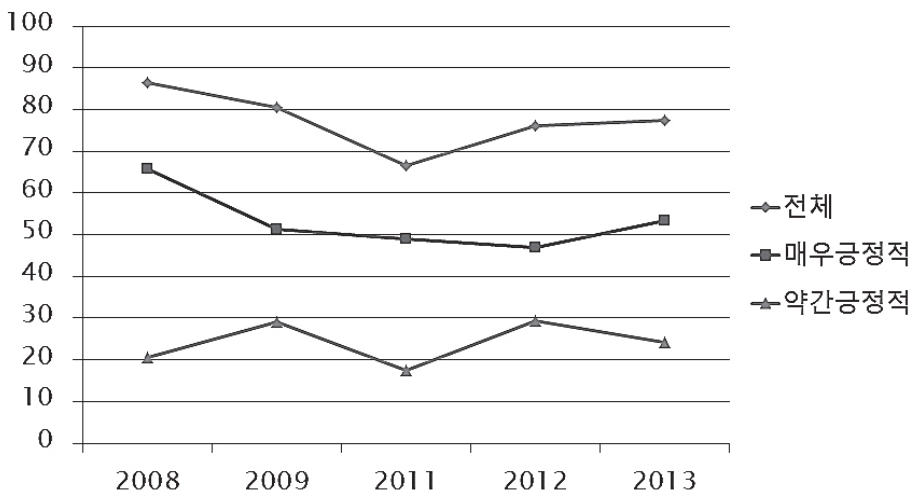


2) 대북지원 효용성

북한주민들에 대해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은 77.5%로 높았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은 16%로 매우 적었다.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1%로 3년 연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이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53.4%로 많았으며, ‘약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24.1%로 북한주민들의 눈으로 보기에 남한의 대북지원은 북한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주민의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일부의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대북지원 무용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사결과다. 일부 탈북자들은 대북지원이 북한당국에게만 이익이 되고 북한주민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논리로 대북지원의 무용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지원이 북한주민들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를 감안하여 대북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기별로 보면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약한 긍정’에서 ‘강한 긍정’으로 옮겨간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7> 대북지원에 대한 평가



3) 대북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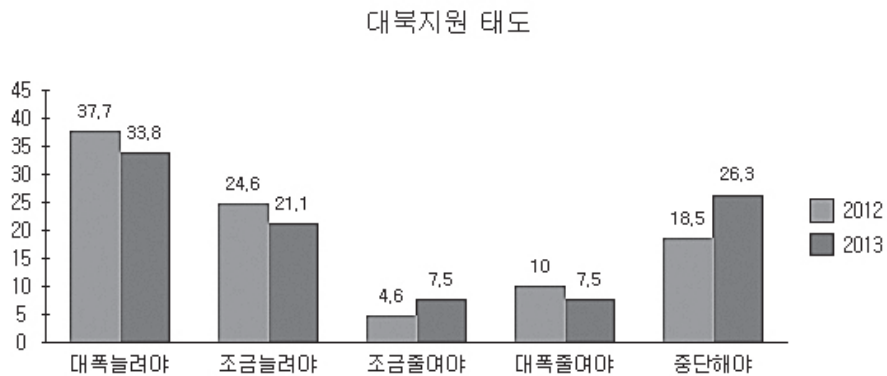
대북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하는 응답의 비율은 54.9%로 나타났고,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은 15.0%,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응답은 26.3%로 나타나 북한주민들 가운데 대북지원을 필요로 하는 의견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12.2%→19.7%→26.3%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북한주민들 가운데 남한의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중단해야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북한주민과 남한주민들 사이에 서로를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적대대상’으로 간주하는 여론이 최근 상승하고 있는 변화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몇 년 동안 북한경제가 호전되어 대북지원의 필요성이 약해졌거나 분배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의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한주민의 여론과 비교하면 북한주민들이 대북지원을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남한주민들은 2103년 대북지원의 효용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응답은 40.3%인 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은 59.6%로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이 19.2%나 많았다. 대북지원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부정적/비판적 의견과는 달리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대북지원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며 더 많은 대북지원을 기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림 8〉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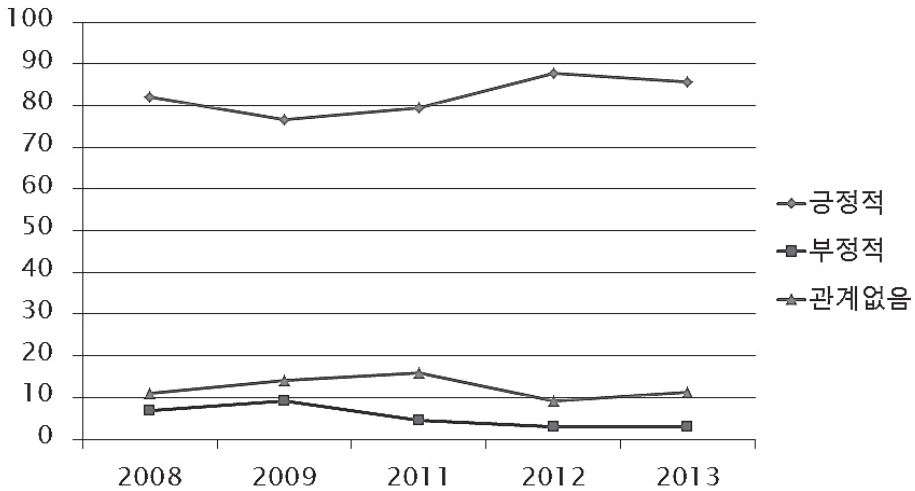


4) 경제투자 인식

대북지원과 비슷한 맥락에서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귀하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투자를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긍정적(73.7%)’과 ‘약간 긍정적(12.0%)’을 포함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85.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는 의견은 3.0%로 적었고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도 11.3%가 되었다.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경제 투자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9〉 대북경제투자에 대한 인식



Ⅲ. 북한사회 변화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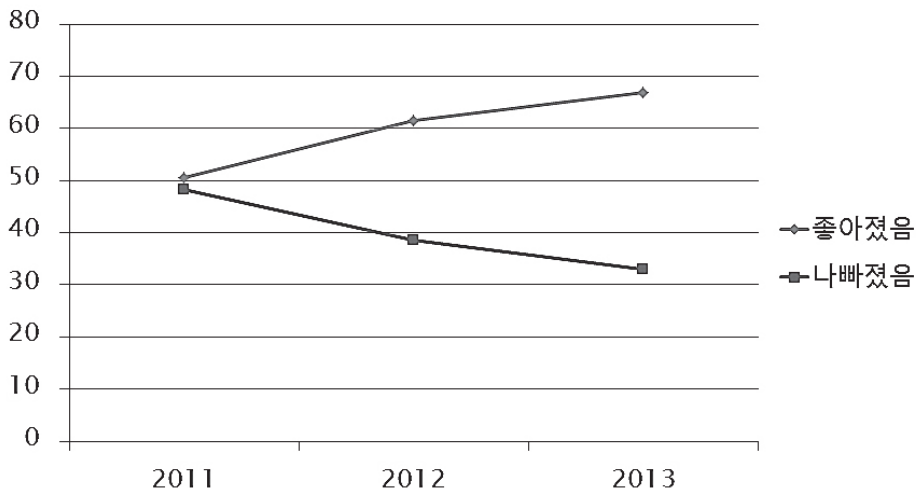
1. 생활수준과 경제활동

1) 생활수준의 점진적 개선

북한 주민생활의 실태를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이 2000년대 이후 ‘고난의 행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그림 10〉에서 보듯이 생활수준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66.9%, ‘나빠졌다’는 응답이 33.0%로 ‘좋아졌다’는 응답이 2배 많았다.

2011년 이후 생활수준이 향상된 사람은 50.5%→61.5%→66.9%로 늘어났고, 생활수준이 나빠진 사람은 48.2%→38.5%→33.0%로 감소하여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최근 3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고난의 행군’시기와 비교한 생활수준 변화



2) 적정소득과 실제소득

2012년에는 한 달 생활비로 적정한 소득으로는 30만원 정도(15.7%)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나, 2013년에는 50만원(30.8%)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2013년 조사에서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월생활비(월소득)가 얼마 정도여야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북한돈 500,000만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0.8%로 가장 많았고, 300,000만원(9.8%), 200,000만원(8.3%) 등으로 응답하였다. 1,000,0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1백만원(12.0%), 2백만원(4.5%), 3백만원(1.5%) 등으로 많았다. 1년 사이에 적정 생활비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져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인 탈북자들 가운데 비공식 소득이 ‘전혀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25.7%, 25.2%였는데, 2013년에는 51.9%로 급증했다. 탈북자를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월급을 못받는 사람들이 1년 사이에 급증한 것이다. 공식소득이 없는 사람

들도 장사나 부업활동을 통해 비공식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비공식 소득도 전혀 없는 사람이 탈북자를 기준으로 할 때 2013년에 24.1%로 많았다. 이러한 수치는 2011년과 2012년 17.1%, 16.5%에 비해서도 늘어난 것으로 지난 1년 사이에 빈곤층의 생활수준은 더 열악해졌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해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및 비공식 소득이 전혀 없는 탈북자들이 1년 사이에 16.5%→24.1%로 늘어났다는 것은 빈부의 양극화가 여전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3) 장사활동

〈장사경험 유무〉

비공식 소득의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탈북자들에게 장사의 경험이 있는가를 물었다. 그 결과 56.8%(2008년)→66.7%(2009년)→69.3%(2011년)→69.2%(2012년)→75.9%(2013년)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약 76%의 응답자가 장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노동자, 농민, 사무원, 전문직업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사는 이들의 제2의 직업으로서 비공식 수입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 1〉에서 지난 5년간 장사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북한사회에 장사 등의 사적 경제활동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장사경험의 유무 (2008~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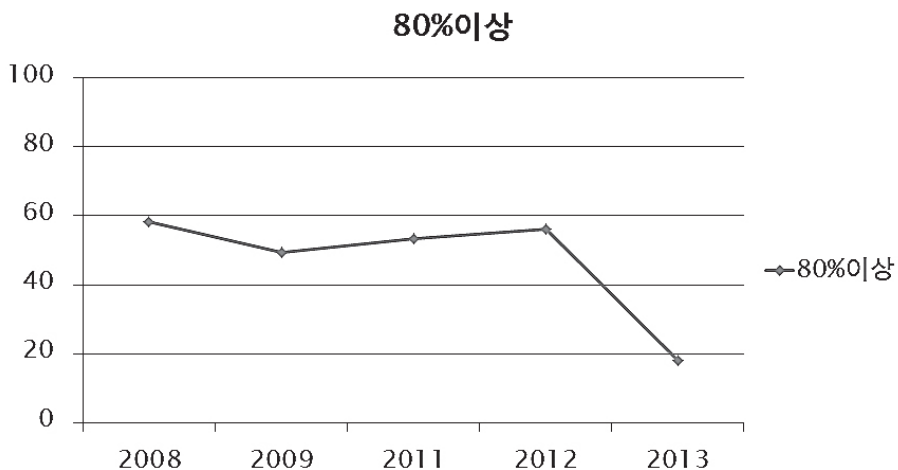
	2008	2009	2011	2012	2013
있다	168(56.8)	206(66.7)	79(69.3)	90(69.2)	101(75.9)
없다	112(37.8)	154(41.6)	31(27.2)	39(30.0)	32(24.1)
무응답	16(5.4)	10(2.7)	4(3.5)	1(0.8)	-
합계	296(100.0)	370(100.0)	114(100.0)	130(100.0)	133(100.0)

북한주민들 가운데 시장이나 장마당에서 장사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응답이 나왔다.

	2008	2009	2011	2012	2013
10%미만	0(0.0)	7(1.9)	2(1.8)	2(1.5)	1(0.8)
20%	3(1.0)	7(1.9)	2(1.8)	2(2.3)	4(3.0)
30%	13(4.4)	15(4.1)	9(8.0)	7(5.4)	10(7.5)
40%	11(3.7)	19(5.1)	5(4.5)	5(3.8)	6(4.5)
50%	18(6.1)	42(11.4)	7(6.3)	6(4.6)	23(17.3)
60%	26(8.8)	42(11.4)	13(8.9)	19(14.6)	51(38.3)
70%	47(15.9)	46(12.4)	14(13.4)	15(11.5)	14(10.5)
80%	91(30.7)	108(29.2)	24(21.4)	39(30.0)	13(9.8)
90%이상	82(27.7)	75(20.3)	36(32.1)	34(26.2)	118(3)
무응답	5(1.7)	9(2.4)	2(1.8)	-	-
합계	296(100.0)	370(100.0)	114(100.0)	130(100.0)	133(100.0)

2013년에 현저히 달라진 현상은 바로 북한 내에서 장사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었다는 점이다. 북한주민들의 장사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북한주민들의 80% 이상이 장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이 2012년 56.2%로 지난 5년 동안 50%대 중반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에는 18.1%로 급감하였다. 70%라는 응답도 많지 않고 60% 정도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탈북자 자신들의 장사 경험은 지난해에 비해 69.2%→75.9%로 늘어났으나 일반주민들의 장사 활동은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김정은 제위원장은 2012년 4월 연설에서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는 언급을 하고 6월에는 이른바 ‘6.28방침’을 내부에 공표했다.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 방침은 북한 경제회생을 위한 개혁개방의 신호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같은 해 8월에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왕자루이와의 면담에서 “북한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9월 15일에는 북중간 황금평 경제특구관리위원회 청사 착공식을 진행하였다.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리영호 군총참모장을 해임한 데서 볼 수 있듯이 강경 보수세력인 군부를 제압하고 실용주의 세력이 당과 내각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경제개발에 대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5월 29일에는 상임위 정령으로 발표하였다. 로동신문 2013.5.3. 에서는 핵병기의 억제력이 있으니 경제건설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발표되었다. 일본의 민영방송사인 ANN은 북한군인 30만 병력을 감축하여 경제건설에 투입하기로 총참모부 명령(2013.6.10.)이 하달되었다는 소식을 보도하기도 하였다.³⁾ 「조선신보」 2012년 ‘6.28조치로 현재 실험 중인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2013.5.10.)를 하기도 하였다.

이번 북한주민조사는 북한의 국가정책이 경제발전 쪽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2012~13년에 주민들은 과거에 비해 생활수준이 높아졌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반면 나빠졌다는 사람은 크게 줄어들었으므로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국가가 경제질서를 바로잡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한 흔적도 보이는데, 장사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60%대로 대폭 줄어든 것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해까지는 장사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80~90%된다는 평가가 압도적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60%대로 떨어진 것은 장사나 개인사업에 대한 국가의 단속이 체감적으로 강화되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공식, 비공식 소득이 전혀 없다는 사람들은 작년보다 더 늘어나 경제가 호전되면서도 빈약한, 부익부의 경제불평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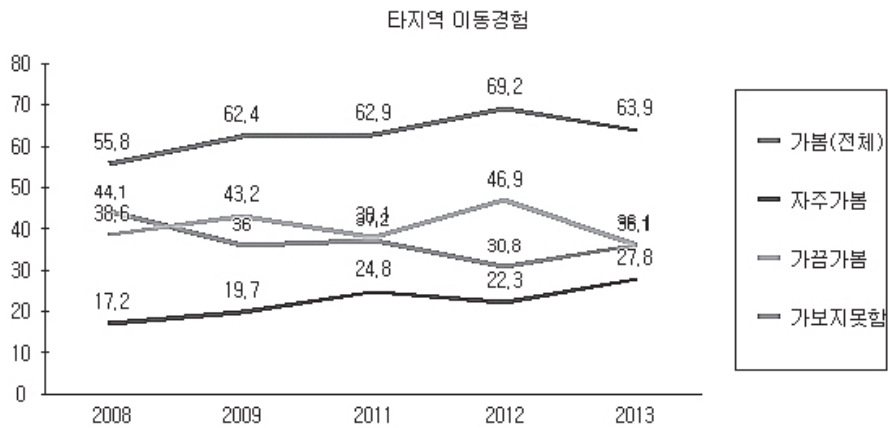
3) 일본 TV아사히 계열의 민영 방송사인 ANN은 2013년 7월 9일자 보도를 통해 북한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2013년 6월 10일자로 이 같은 명령을 인민무력부 총참모부에 내렸다고 공개하였다. ANN은 8월 말까지 장교 5만 명, 병사 25만 명 등 총 30만 명(119만 전체병력의 4분의 1 규모)의 병력을 빼내 경제부문으로 이동시키라는 것이 최고사령부의 명령이었다고 주장했다.

2. 전반적 사회통제

1) 자리적 이동

주민 유동성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가늠하는 유력한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북한은 시, 군, 구역 단위로 자리적 이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⁴⁾ 주민들의 자리적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사회에서 주민 유동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폐쇄체제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단초가 된다. 아래의 <그림 12>는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가보았다’는 응답이 62.9%(11년)→69.2%(12년)→63.9%(13년)로 1년 사이에 5.3% 포인트 감소하였다. 62.9%→69.2%로 증가하던 자리적 이동이 63.9% 수준으로 다시 주춤해진 것이다. 이 역시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후 전반적 사회통제가 강화된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12> 타지역 이동경험



2) 직장 내 생산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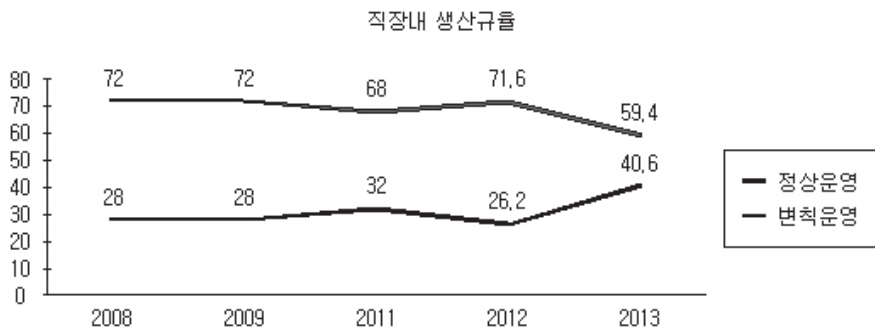
<그림 13>은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대체로 지켜지지 않고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생산규율이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은 약 40%인데 반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4) 김병로, 『북한의 지역자립체제』(서울: 통일연구원, 1999).

60% 수준을 기록하여 직장의 생산활동이 대체적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추세를 보여준다. 정상운영의 수준이 26.2%→40.6%로 14.4% 포인트가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이 집권한 이후 직장 내의 생산활동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3〉 직장 내 생산규율 (2008~2013)

단위 :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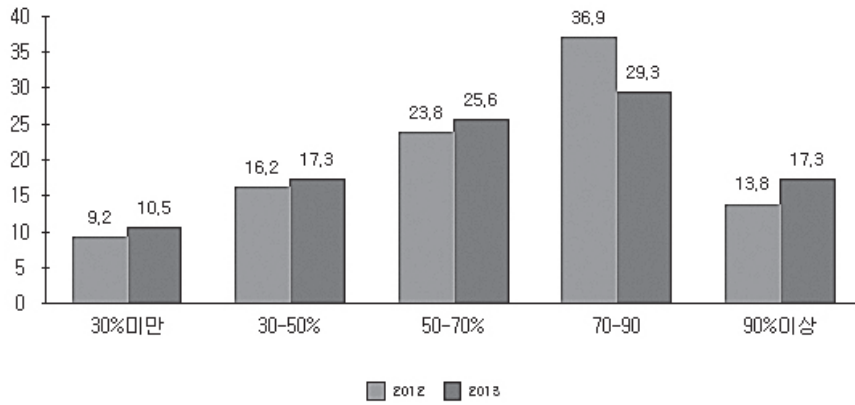


3) 생활총화 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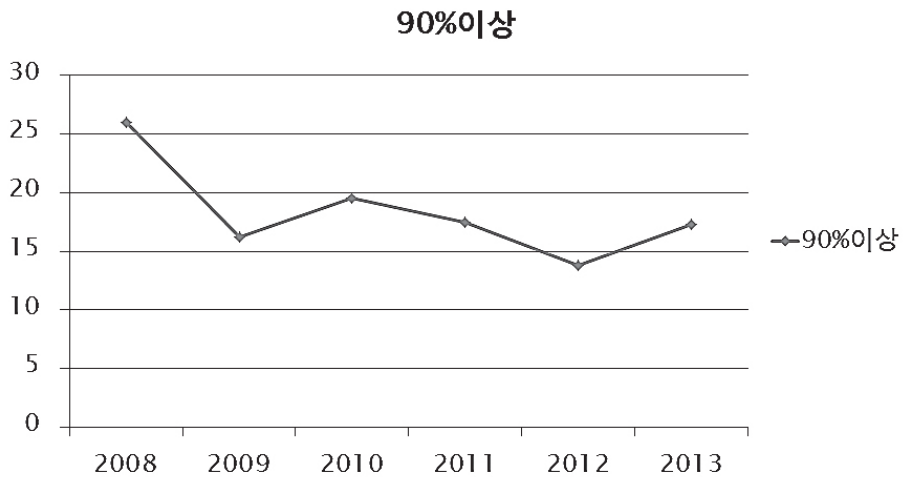
〈그림 14〉는 북한의 사회통제 실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주간 생활총화의 참가실태를 보여준다.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총화 참여율 70~90%라는 응답은 36.9%→29.3%로 줄었으나, 90%이상이라는 응답은 13.8%→17.3%로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문항은 2011년에 처음 조사하기 시작한 항목으로 과거 통일연구원의 자료⁵⁾에서 '90%이상'이라는 응답이 26.0%(08년), 16.2%(09년), 19.5%(10년)로 조사된 점과 비교하면 17.5%(11년), 13.8%(12년)로 생활총화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다 2013년에 다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통일연구원 자료는 2010년 8월말부터 9월초에 걸쳐 탈북자 6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이다.

〈그림 14〉 생활총화 출석률 (2012~13년)



〈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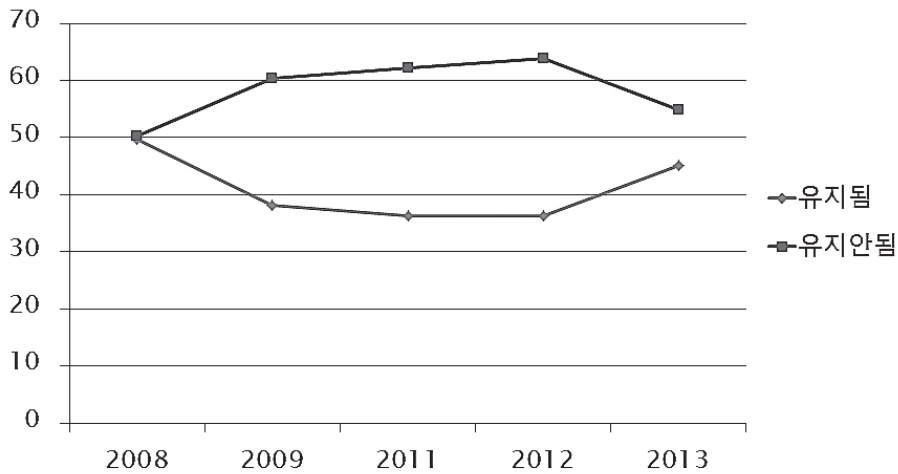


4) 사회통제 실태

위에서 설명한 정부비판행위의 감소는 사회통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에 거주할 당시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응답은 45.1%,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4.9%로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최근 사회통제가 이완되고 있던 추세와는 달리 2013년에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응답이 36.2%→45.1%로 1년 사이에 9% 포인트가 상승하였다. 이는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2년 이후 강화되고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림 16〉 사회통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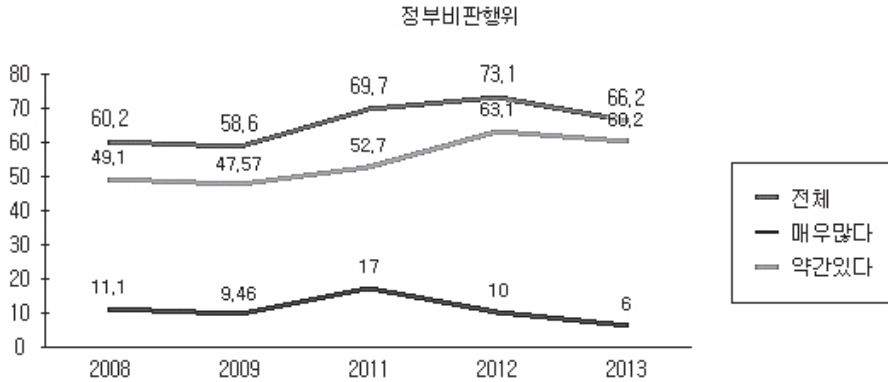


5) 정치적 비판행위

〈그림 17〉은 북한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가 2013년에 크게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은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에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많다’(6.0%)와 ‘약간 있다’(60.2%)를 합하여 ‘있다’는 의견이 66.2%로 많았다. ‘대체로 없다’ 22.6%, ‘전혀 없다’ 11.3%를 합하여 ‘없다’는 의견은 33.9%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증가일로에 있던 추세와는 달리 2013년에 정치적 비판행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간에 정치적 비판행위가 ‘있다’는 응답은 60.2%(08년)→58.6%(09년)→69.7%(11년)→73.1%(12년)→66.2%(13년)으로 변화하여 작년까지 5~10% 포인트로 증가하던 추세가 7% 포인트 감소하였다.

〈그림 17〉 정부비판행위 (2008~2013)

단위 : 백분율(%)



대주민 사회통제가 강화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주민통제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이행한데 따른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 북한은 2009년 4월 28일 형법을 개정(수정보충)하였고 7월 21일과 10월 19일 추가 개정을 단행하였다. 2011년 10월 16일에는 행정처벌법을 개정하였다. 2010년 7월 8일에는 주민행정법을 제정하였으며 행정검열법도 2010년에 제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⁶⁾ 주민행정법의 제정으로 주민통제와 관련이 있는 북한 법규가 기존의 형법, 행정처벌법, 인민보안단속법(구 사회안정단속법)에서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주민행정법은 기존에 시행되던 내용들을 규정화한 것이 대부분이나 인민반에 반장과 부반장을 두고 이 직책을 인민반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제10조)하고, ‘관리담당구역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 행정처벌법에서는 경제관리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늘어났다. 계획적 생산질서위반행위(제50조), 국가재산공공탐오행위(제69조), 화폐위조 및 위조화폐사용 행위(78조), 화폐교환질서위반행위(제80조)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제정된 법규를 바탕으로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2년부터 적극 집행함으로써 사회통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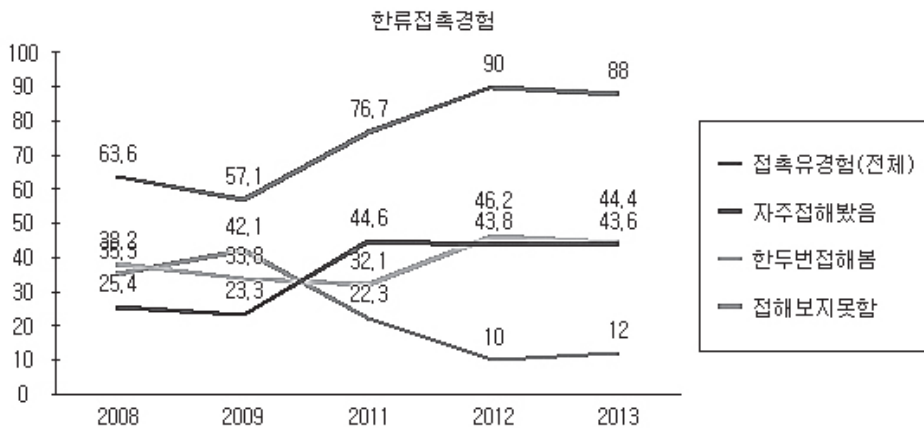
6) 이규창, “북한의 주민통제 법제 정비와 체제유지,”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2012~45(2012.12).

3. 문화의식

1) 한류 접촉 담보

〈그림 1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류’의 확산과 정보유통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63.6%(08년)→57.1%(09년)→76.7%(11년)→90.0%(12년)→88.0%(13년)로 90%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작년에 급증했던 접촉의 속도는 2013년 들어 90%→88%로 다소 주춤하는 추이로 돌아섰다. 지난 몇 년간 북중간 교역과 인적 왕래의 증가와 함께 남한 및 외부의 문화유입이 크게 늘었으나, 김정은 정권이 집권한 이후 조직생활의 통제와 전반적 사회통제가 강화됨으로써 문화접촉의 속도도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8〉 한류접촉경험 (2008~2013)



북한의 정보유통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들이 탈북 후 북한소식을 어느 정도 접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표 2〉는 약 80% 정도의 응답자들이 탈북 후에도 북한소식을 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8년과 2009년에 67.9%, 61.9%의 탈북자들이 북한소식을 접했으나 2011~13년에 접촉 비율이 71.1%→79.3%→79.0%로 증가하여 북한 내부 주민들과의 접촉면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는 작년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는 없으나 북한 내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 중국 조선족 친인척들의 방북을 통한 접촉, 북한가족들의 중국방문, 탈북 브로커의 활동, 중국 휴대전화의 활용 등을 통해 북한 내의 소식을 듣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조중국경자대의 경제활동을 강화하고 정보통제 및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정보접촉은 위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에 응한 탈북자 가운데 남한에 친척이 있는 비율이 30%(08년)→40%(09년)→56%(11년)→62.3%(12년)→65.4%(13년)으로 증가한 것을 보아도 북한 내의 정보접촉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탈북 후 북한소식 경험의 정도 (2008~2013)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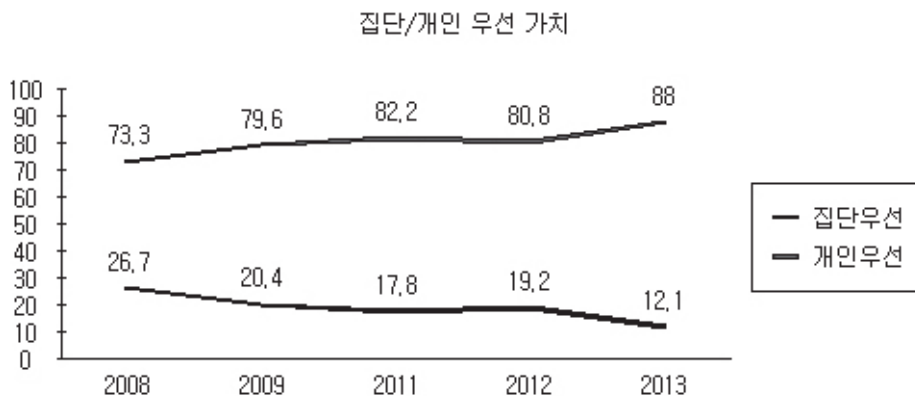
	2008	2009	2011	2012	2013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다.	45(15.2)	46(12.4)	19(16.7)	27(20.8)	30(22.6)
조금 접할 수 있다.	156(52.7)	183(49.5)	62(54.4)	76(58.5)	75(56.4)
거의 접할 수 없다.	86(29.1)	122(33.0)	30(26.3)	27(20.8)	28(21.1)
무응답	9(3.0)	19(5.1)	3(2.6)	-	-
합계	296(100.0)	370(100.0)	114(100.0)	130(100.0)	133(100.0)

2) 개인주의 가치 확대

〈그림 19〉가 보여주듯이 북한에서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의 가치는 개인주의의 지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의 조사까지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가 2080으로 유지되었으나, 2013년에는 개인주의가 88%로 급증했다.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북한에서 개인주의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경제발전과 주민유동성 및 정보유통의 증대로 과거 사회주의 체제가 강조하던 집단주의 가치가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연간에 주춤하던 개인주의 확대 경향은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다시 확산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림 19〉 개인/집단 우선 가치 (2008~2013)

단위 :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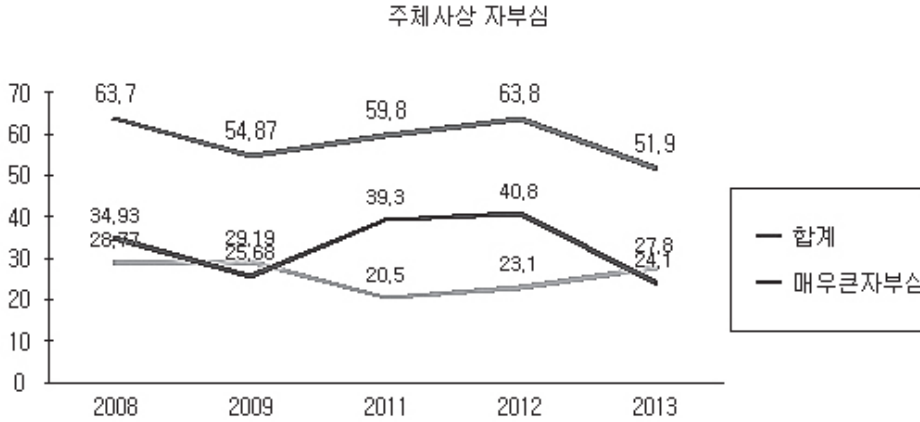
4. 정치사상의식

1)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그림 20〉은 주체사상 이념에 대한 내면화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주체사상을 자부심이 ‘있다’고 답한 응답률은 약 52%로 ‘없다’는 응답률 48.1%에 비해 많았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하면 63.8%→51.9%로 11.9% 포인트가 하락하여 큰 폭으로 자부심이 떨어졌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조직생활과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번 조사의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으나 주체사상의 자부심은 이와는 반대로 하락하였다. 아직은 대체로 주체사상의 자부심이 유지되고 있으나 금년과 같은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정치사상의식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20〉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2008~2013)

단위 : 백분율(%)



2) 김정은 지지도

〈그림 21〉은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평가하는 질문으로 김정은의 지지도를 보여준다.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0%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61.7%로 기대 이상의 높은 지지도가 나왔다. 김정일 생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를 ‘50%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이 49.3%(08년)→54.3%(09년)→55.7%(11년)→70.7%(12년)였던 것과 비교하면 61.7%는 매우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작년조사에서 김정은이 후계자가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57.2%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결과를 감안하면 현격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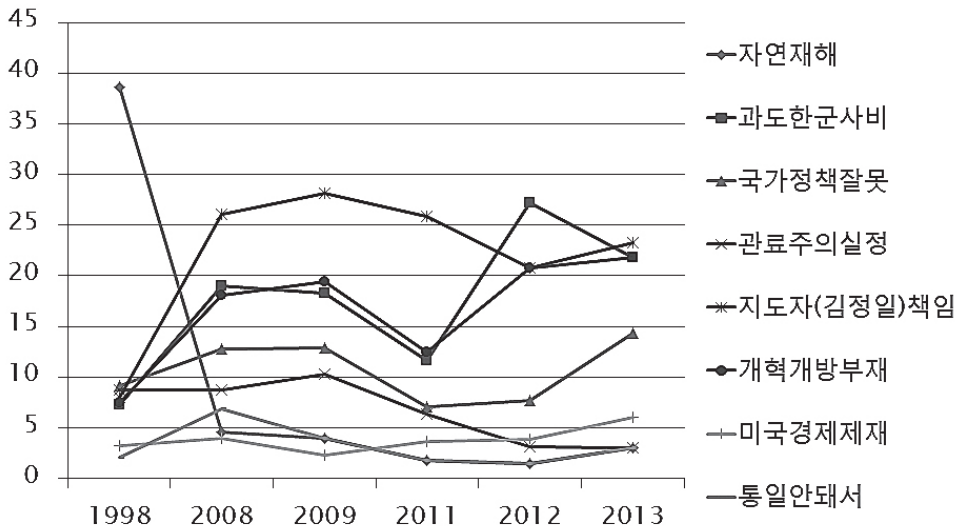
〈그림 21〉 김정일-김정은에 대한 지지도 (2008~2013)

단위 : 백분율(%)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는가?”라는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지도자 때문’이라는 응답이 23.3%로 가장 많았고, ‘과다한 군사비 지출(21.8%)’과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21.8%)’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지도자 때문’이라는 이유가 최근 몇 년간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올해 다시 늘어났다. 군사비 부담 때문에 경제발전을 못한다는 선전담론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어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의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과시하면서 이제는 핵무기가 있으므로 군사비가 많이 들지 않아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군사비 부담 때문에 경제발전을 못한다는 담론은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그림 22〉 경제침체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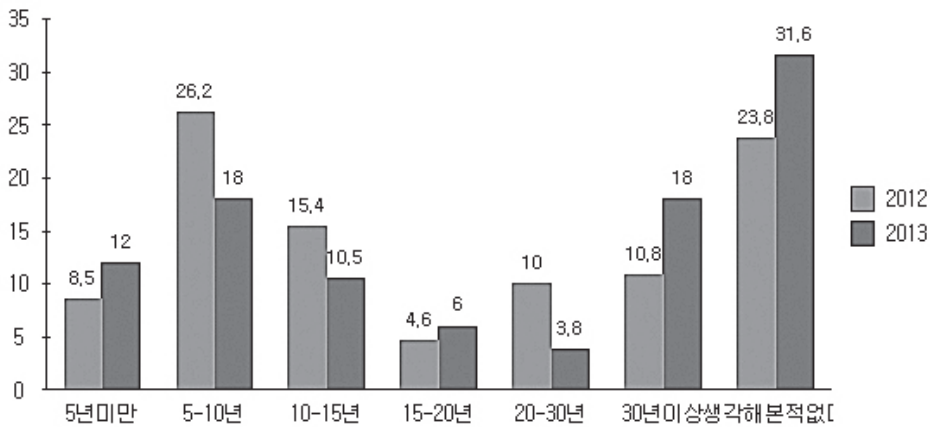


위의 〈그림 22〉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북한당국이 식량난을 미국의 경제제재와 봉쇄 때문으로 대외적으로 항변하고 있으나, 일반주민들의 의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난의 원인을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으로 보는 사람은 3.9%(08년), 2.3%(09년), 3.6%(11년), 3.8%(12년), 6.0%(13년)로 매우 낮으며 최근 5년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는 아마도 북한당국이 주민들에게는 미국의 경제봉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3) 북한 사회주의 정권 지속 여부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생각해본적 없다’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년이상’, ‘5~10년’이 각각 18.0%로 뒤를 이었다. 작년과 비교할 때 ‘5년미만’이라는 단기봉괴론이 다소 높아지긴 하였으나, 대체로 ‘30년 이상’ 또는 ‘생각해본적 없다’는 장기유지론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아직 20대의 젊은 감정은 정권이 집권한 후 북한주민들은 감정은 1인 통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체제의 장기적 존속 가능성 쪽으로 여론이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 북한 사회주의 정권 지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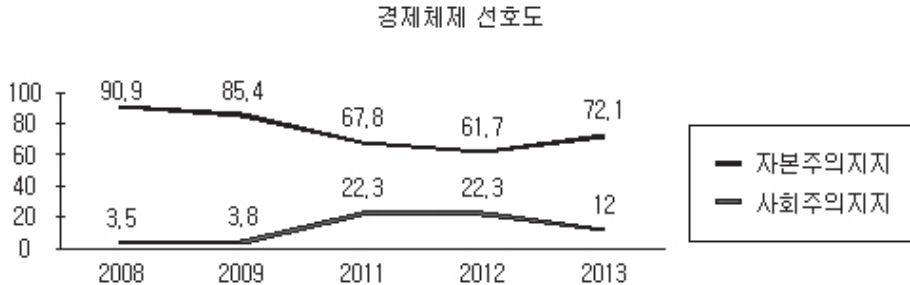


4) 경제체제 선호도

주민들의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의 변화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문항으로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다. 그 결과 〈그림 24〉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했다는 응답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했다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72.12로 자본주의지지 의견이 많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2013년에 사회주의 지지에 대한 응답은 22.3%→12.0%로 10.3% 포인트가 감소한 반면, 자본주의지지 의견은 61.7%→72.1%로 10.4% 포인트 증가했다. ‘두 가지 모두를 비슷하게 지지했다’는 의견은 10.7%(11년)→16.5%(12년)→15.8%(13년)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림 24〉 경제체제 선호도 (2008~2013)

단위 : 백분율(%)



2009년 11월 화폐개혁 이후 시장 활동이 증가하고 주민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회주의 체제와 계획경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 커졌으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사회가 통제되고 안정되자 다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장사나 개인활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조직생활과 생산규율이 강화되는데 따른 주민들의 반발심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경제질서와 사회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에 4월과 12월 장거리 로켓을 시험하는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였고 핵 보유국 선언과 3차핵실험 등으로 대내적으로 자신감을 심어주고 대외적으로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온 것은 정권출범 이후 대대적인 선전과 학습활동의 결과일 것으로 짐작된다.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 당제비서를 당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였고, 13일에는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이와 같이 2012년 내내 김정은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활동과 행사가 진행되었다.

한편, 사회통제와 직장의 생산규율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도 정권출범 시기에 조직활동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탈북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7월 5일에는 탈북여성 박정숙의 재입북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도 추가로 탈북자의 재입북 기자회견을 주선하여 북한주민들이 탈북과 남한사회에 대한 환상을 갖지 못하도록 적극 시도하였다. 그런가 하면 2012년 9월 2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는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법령을 발표하였으며, 11월에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신설하고 장성택 당중앙

위원회 행정부장이 위원장으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당국의 정치사회적 활동이 2013년 북한의 사회통제 강화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주의 가치 확산과 주체사상의 자부심 하락과 같은 내면적인 의식변화는 지속되고 있다.

IV. 닫으며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남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상당한 불신과 불안감을 갖고 있는 있으나 그럼에도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식이 63.9%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남한의 대북 '무력도발'에 대한 불안의식이 낮아지고 대남경계심리가 다소 완화됨과 동시에 남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함께 높아졌다. 북핵의 위력이 남한에 매우 위협적일 것이라는 의식이 남한주민이 생각하는 위협보다 더 강하나 지난 1년 사이에 81% 포인트가 약해졌다. 북한주민의 대남인 지도는 지난 1년 사이에 4.4% 포인트 높아졌으나 남북한의 차이와 이질성에 대한 의식은 매우 크며 정치, 역사, 언어, 생활방식에서 남한주민이 느끼는 차이의 감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주민의 대남 인지도를 분석해보면, 북한주민들이 공식매체 이외에 인적 접촉과 정보매체의 활용 등 다양한 비공식 채널을 통해 남한소식을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인지도도 높을 뿐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6.2%가 남한의 대북지원 사실을 알고 있으며 77.5%는 대북지원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54.9%가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최근 1~2년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남한주민과 비교하면, 남북간 이질성 인식이나 상호인식, 안보불안 등의 여러 영역에서 매우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으나, 북한주민들이 남한주민에 비해 상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수준에서,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인식에서 북한주민은 남한주민보다 상대를 더 긍정적이고 신뢰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가 탈북자 샘플에서 나타나는 편향성인지 실제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인지 북한내부 주민의 샘플조사를 통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들의 면접조사를 통해서 본 북한실태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사회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생활수준이 나빠졌다는 평가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소득이 전혀 없는 극빈층은 더 늘어났는데 이는 장사활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탈북자 자신들의 장사활동 경험은 지난 1년 사이에 늘었지만, 일반주민들의 장사활동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작년까지 주민들의 80~90%가 장사를 한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으나, 올해는 60%라는 응답 쪽으로 대폭 이동하였다.

2013년 조사에서 지난 1년 동안 사회통제는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정치사상의식이 부침을 겪는 것으로 보이나 새로 출범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기대감을 삼어줌으로써 체제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의 자리적 이동이 줄고 직장내 생산규율이 정상화되었으며 조직생활과 사회통제가 상당 부분 복원됨에 따라 정치적 비판행위도 감소하였다. 가파르게 증가하던 한류접촉 속도도 담보상태로 돌아섰다. 그러나 개인과 가족을 중시하는 생활패턴은 더 확대되었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선호도가 늘었으며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도 11.9% 포인트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는 작년의 '김정은후계자'에 대한 매우 부정적 평가와는 달리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 사회주의 정권의 지속여부도 단기붕괴론이 아닌 장기유지론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주민의 삶과 의식

- 발표 4

북한주민의 통일과 한반도 미래 인식

송영훈 (IPUS 선임연구원)

북한이탈주민의식조사 2013: 통일의식, 주변국인식, 남한사회적응

2013년 8월 29일 목요일

송영훈
(IPUS 선임연구원)

통일의 필요성과 염원

-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필요하다: 95.2% ('11), 91.3% ('12), 91.0% ('13)
 - 약간 필요하다: 0.0% ('11), 2.4% ('12), 2.3% ('13)
- “귀하는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011년 1명, 2012년 1명, 2013년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북한주민이 통일을 원한다고 응답함.
- 남한주민의 통일의 필요성 인식
 - 2013년 54.9%가 '매우 또는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함.
- 통일의 필요성이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에게 달리 나타나는 것은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음.

통일의 가능시기

북한에 살고 있을 때 통일이
10년 이내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응답자가 3년 동안 51%, 40.9%,
34.6% 이고, 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이 40%를 넘었음.

통일시기	2011	2012	2013
5년 이내	20.2	11.8	12.0
10년 이내	30.8	29.1	22.6
20년 이내	12.5	8.7	8.3
30년 이내	2.9	1.6	4.5
30년 이상	6.7	5.5	8.3
불가능하다	26.9	43.3	44.4
합계 (N)	104	127	133

통일이 필요하고 원한다고
하지만, 통일의 현실적
실행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

북한/개인의 통일이익

통일이익	집합적 이익 기대감			개인적 이익 기대감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매우 이익이 됨	92.4	83.5	91.7	78.1	66.1	78.2
다소 이익이 됨	7.6	13.4	7.5	17.1	28.4	17.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음	0.0	2.4	0.8	3.8	4.7	3.0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음	0.0	0.8	0.0	1.0	0.8	1.5
합계 (N)	105	127	133	105	127	133

95% 넘는 응답자들이 통일이 북한에 그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함.

그런데 매우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통일의
개인적 이익 기대감에서 15-20%가 낮아짐

통일의 사회문제 개선 기여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합계 (N)
빈부격차	2011	58.2	24.5	5.1	5.1	7.1	98
	2012	55.7	24.2	7.3	7.3	5.7	124
	2013	62.4	24.1	3.8	2.3	7.5	133
실업문제	2011	66.3	21.4	1.0	7.1	4.1	98
	2012	61.8	18.7	9.8	4.1	5.7	123
	2013	72.5	17.6	2.3	3.8	3.8	133
지역갈등	2011	28.4	25.3	12.6	20.0	13.7	95
	2012	26.5	23.1	14.9	19.0	16.5	121
	2013	30.3	24.2	10.6	26.5	8.3	132
이념갈등	2011	41.2	22.7	10.3	10.3	15.5	97
	2012	36.1	17.2	14.8	18.9	13.1	122
	2013	43.9	16.7	10.6	20.5	8.3	132

대북정책별 통일에의 기여도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합계(N)
인도적 지원	2011	58.1	10.5	22.9	8.6	105
	2012	44.4	21.0	19.4	15.3	124
	2013	48.9	15.8	17.3	18.1	132
사회문화교류	2011	52.5	31.3	13.1	3.0	99
	2012	44.3	36.1	13.9	5.7	122
	2013	46.2	36.4	13.6	3.8	132
경제협력	2011	54.5	24.8	13.9	6.9	101
	2012	49.2	33.3	15.1	2.4	126
	2013	55.6	24.8	12.8	6.8	133
정상회담	2011	52.0	26.0	18.0	4.0	100
	2012	53.2	26.6	16.1	4.0	123
	2013	57.9	30.1	6.8	5.3	133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의 유대감

남북주민의 유대감	2011	2012	2013
매우 잘 어울려 지낼 것	36.9	34.7	36.8
그럭저럭 어울려 지낼 것	43.7	39.4	50.4
별로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	19.4	25.2	10.5
전혀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	0.0	0.8	2.3
합계 (N)	103	127	133

대부분이 남북주민이 큰 문제없이 잘 어울려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함.

정착초기 강한 민족적 친밀감이 유지되고 있을 것임.
그렇지만, 현재 남한주민들이 가지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완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임.

통일 후 거주지

통일 후 거주지	2011	2012	2013
북한에서 살 것	28.9	32.3	27.8
남한에서 살 것	45.2	45.7	46.6
남북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	25.0	20.5	23.3
외국에서 살 것	1.0	1.6	2.3
합계 (N)	104	127	133

탈북민들이 통일 후에 살고 싶어하는 곳이 반드시 남한지역이라고 가정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남한 거주 기간이 1년이 안 된 시점임을 고려해야 함.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북한에 살고 있을 때 다음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셨습니까?

- 중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음.

친밀감	2012	2013
미국	1.6	1.5
일본	0.8	0.0
남한	24.0	13.0
중국	70.4	83.2
러시아	3.2	2.3
합계 (N)	125	131

한반도 평화 위협 국가

북한에 살고 있을 때 다음
중 어느 나라를 가장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셨습니까?

- 예상대로 미국을 가장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라고
하였음.
- 반면, 중국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들도 20%가 넘음.

평화위협	2012	2013
미국	66.1	71.4
일본	3.3	6.8
남한	8.3	1.5
중국	22.3	20.3
러시아	0.0	0.0
합계 (N)	121	133

미국의 통일희망

통일희망	2012	2013
매우 원한다	16.7	7.5
원하는 편이다	15.1	12.0
원하지 않는 편이다	21.4	31.6
전혀 원하지 않는다	46.8	48.9
합계 (N)	126	133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북한에 살 때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중국의 통일희망

통일희망	2012	2013
매우 원한다	3.2	2.3
원하는 편이다	11.8	14.4
원하지 않는 편이다	40.2	34.1
전혀 원하지 않는다	44.9	49.2
합계 (N)	127	132

대다수의 응답자들이(약 85%) 북한에 살 때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 중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자들이 70-80%에 이르는데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

일본, 러시아의 통일희망

통일희망	일본		러시아	
	2012	2013	2012	2013
매우 원한다	3.2	0.8	2.4	5.3
원하는 편이다	7.3	6.1	30.1	29.0
원하지 않는 편이다	30.7	38.6	37.4	40.5
전혀 원하지 않는다	58.9	54.6	30.1	25.2
합계 (N)	124	132	123	131

- 10명 중 9명이 일본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 10명 중 7명이 러시아가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북한에 거주할 때 주변국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주변국 협조	2012	2013
매우 필요하다	41.3	54.1
약간 필요하다	22.2	23.3
별로 필요하지 않다	22.2	16.5
전혀 필요하지 않다	14.3	6.0
합계 (N)	126	133

응답자들의 약 80%가 북한에 살 때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가들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주변국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주변국가의 협조가 없으면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친밀감	2011	2012	2013
매우 친근하게 느낌	44.2	35.4	42.9
다소 친근하게 느낌	47.1	54.3	44.4
별로 친근하게 느끼지 않음	8.7	9.5	12.8
전혀 친근하게 느끼지 않음	0.0	0.8	0.0
합계 (N)	104	127	133

약 10명 중 9명은 남한주민을 친근하게 느낌.

남한주민의 포용성 인식

포용성	2011	2012	2013
매우 포용적이다	27.9	20.6	24.8
약간 포용적이다	48.1	50.0	54.9
별로 포용적이지 않다	23.1	27.8	19.6
전혀 포용적이지 않다	1.0	1.6	0.8
합계 (N)	104	126	133

친근감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포용적이지 않다는 응답자들이 약 20%가 넘음.

친근감 & 포용성에 대한 인식

	매우 친근하 게 느낌	다소 친근하 게 느낌	별로 친근하게 느끼지 않음	전혀 친근하 게 느끼지 않음	합계 (N)
매우 포용적이다	71	59	16	1	147
약간 포용적이다	13	115	48	1	177
별로 포용적이지 않다	4	12	21	1	38
전혀 포용적이지 않다	0	0	0	1	1
합계 (N)	147	177	38	1	363

2011-2013 자료 중 친근감과 포용성에 대한 응답의 교차표임.

친근감이 민족적 동질성에 대한 인식일 수 있지만 포용성은 남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입국시 가지는 기대감과의 거리감의 반영일 수 있음.

탈북민들의 자기정체성

자기정체성	2011	2012	2013
나는 남한사람이다	74.3	64.3	63.9
나는 북한사람이다	21.0	31.0	31.6
나는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니다	4.8	4.8	4.5
합계 (N)	105	126	133

약 10명 중 6명이 스스로를 남한사람이라고 응답함.

남한생활만족도

생활의 만족도	2012	2013
매우 만족	38.6	44.4
대체로 만족	33.9	34.6
보통	25.2	18.1
별로 만족하지 않음	2.4	2.3
전혀 만족하지 않음	0.0	0.8
합계 (N)	127	133

10명 중 7-8명은 남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음.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지원정책 만족도	2012	2013
매우 만족	43.3	55.6
대체로 만족	42.5	31.6
보통	11.0	11.3
별로 만족하지 않음	3.2	0.8
전혀 만족하지 않음	0.0	0.8
합계 (N)	127	133

10명 중 8명 이상이 정부의 정착지원정책에 만족하고 있음.

초기 정착시 지원정책에 만족할지라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만족할지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남한에서의 취업형태

취업형태	2011	2012	2013
정규직 근로자	24.5	33.1	9.0
계약직 근로자	4.3	1.7	3.8
일용직근로자	11.7	5.0	9.0
고용자	1.1	0.0	0.0
자영업자	3.2	2.5	0.8
실업자	3.2	8.3	21.8
비경제활동인구	52.1	49.6	55.6
합계 (N)	94	121	133

정착초기 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의 비율이 높음